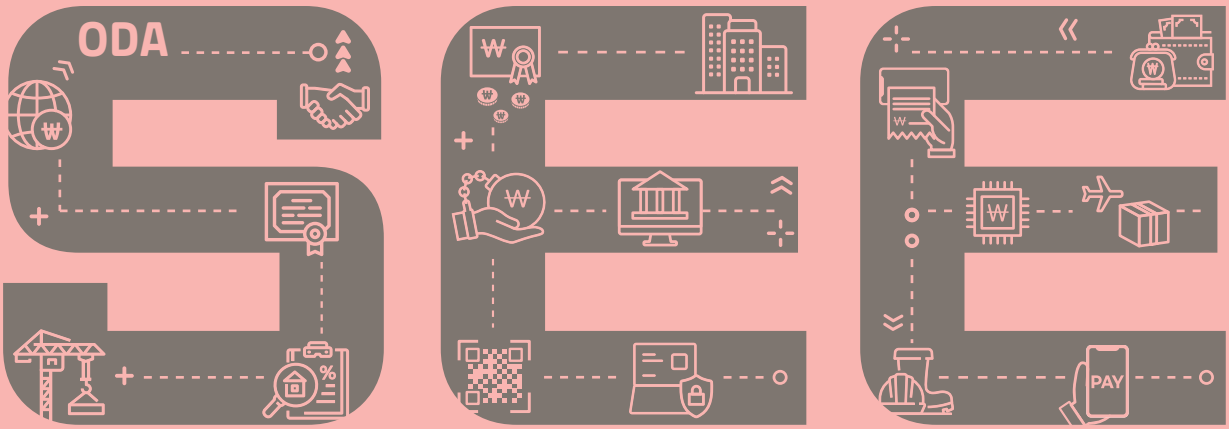
경제로 세상 읽기

2025.1. ~ 2025.12.



: 경제로 바라보는 당신의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선택의 연속인 인생, 경제로 세상 읽기 와 함께 경제적 사고를 키워 보아요!

이 책자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econedu.go.kr)에 게재된 <경제로 세상 읽기> 시리즈를 엮은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만드는 <경제로 세상 읽기>는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이나 경제의 흐름을 기본 경제 개념으로 풀어 보는 시리즈입니다. 이 책자에 포함된 원고는 경제배움e+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표기는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의 지침을 따랐으며, 기업·기관·기구 명칭, 협약·협정 명칭 등은 언론에서 통용되는 표기 관행을 적용했습니다. 책은 겹낫표(『 』)로, 보고서와 국내 법은 홑낫표(「 」)로, 영화·음악·잡지와 방송 프로그램은 홑화살괄호(< >)로 표기했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서술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차 례

2025년 1호
개인만 살 수 있는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 | 임효상 KDI 전문연구원 1

2025년 2호
금융과 IT의 융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 임효상 KDI 전문연구원 9

2025년 3호
K-아파트 이야기 | 임효상 KDI 전문연구원 17

2025년 4호
우리 동네에 도로, 철도, 공연장을 지어주세요! | 김유영 KDI 전문연구원 25

2025년 5호
내 통장 속 돈은 얼마나 안전할까? | 임효지 KDI 전문연구원 31

2025년 6호
지금은 바야흐로 해외직구의 시대 | 김유영 KDI 전문연구원 39

2025년 7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특별한 여정 | 임효상 KDI 전문연구원 45

2025년 8호
유동성을 규제하는 이유는? | 차성훈 KDI 전문위원 53

2025년 9호
법정통화의 변신, CBDC와 스테이블코인 | 차성훈 KDI 전문위원 59

2025년 10호
충전한 '내 돈'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 | 김유영 KDI 전문연구원 67

2025년 11호
개인이 빚을 안전하게 갚을 수 있도록 | 서휘원 KDI 전문연구원 73

2025년 12호
실직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는 이유 | 차성훈 KDI 전문위원 81

키워드 채권,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 저축

개인만 살 수 있는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

"2배로 돌려드립니다… 20년간 한국에 투자하세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적금처럼 돈을 넣는 저축성 상품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 연 단위 복리 이자가 붙고 분리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2024년 6월

출처: 국민일보, 2024.5.31.

2024년 6월, 정부는 '국내 금융 기관에 치중된 국채 수요 기반의 다변화'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 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 제공'을 위해 아래 표 1과 같이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도 생소한 용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표 1 개인투자용 국채 주요 내용

발행	• 2024년 6월부터 매월 발행 ※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하여 12월은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 투자금액: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
종목	• 10년물 및 20년물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 표면금리: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 가산금리: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공표 •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유통·환매	• 상속·유증·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 (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주: 2025년 3월부터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5년물이 새롭게 발행되며, 1인당 연간 구매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기획재정부, 2025.1.22)

출처: 기획재정부, 2024.5.30.

채권이란 무엇이며, 누가 왜 발행하나요?

교육과정
- 중학교 「사회2」 경제생활과 선택
-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저축과 투자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국채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채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정부나 기업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채권이란 '정부나 기업이 정책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이 증서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상환할 원금의 액수(액면금액), 언제 갚을 것인지(만기일), 그리고 1년에 몇 %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표면금리) 등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1)]

그림 1 채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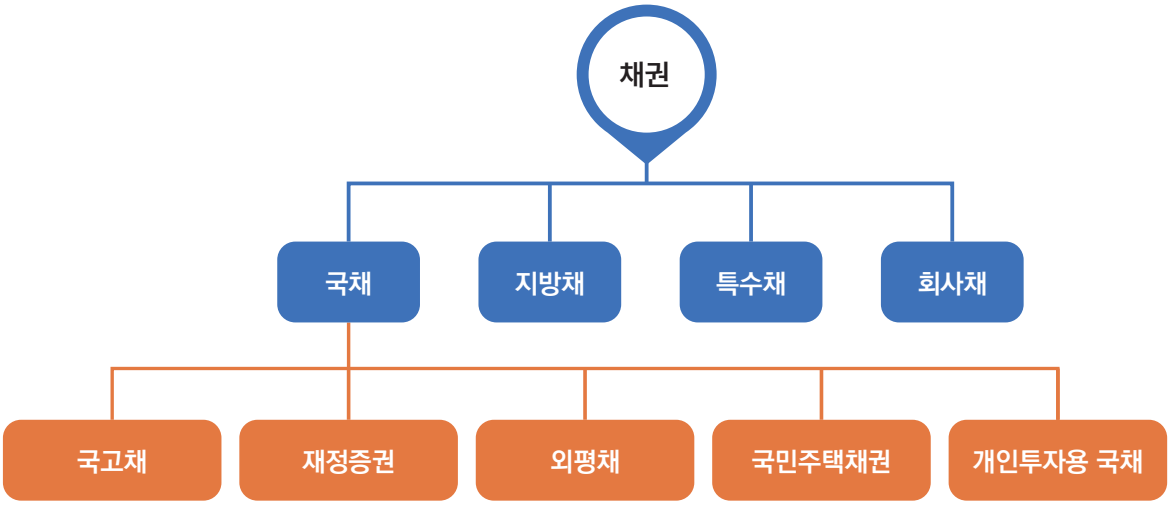
채권을 구입한 사람(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만기 시점까지 채권을 보유하여 약속된 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차용증서와는 달리 채권은 만기일이 될 때까지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만기일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팔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루고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채권은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주체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이 가능한 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주식회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각 주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국채는 정부가 국방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자금은 대부분 세금을 걷어 마련하는데, 세금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하여 메우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1950년에 최초로 국채를 발행한 이후, 현재는 국고채권(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제1종)과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고채'는 국가의 재정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채 중 발행물량이 가장 많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고채권은 현재 한국의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채권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지표금리[2)]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증권'은 일시적으로 국고에 자금이 부족할 때 이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1) 현재 종이 형태의 실물 채권은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2) 금융 거래의 결과로 지급하거나 교환해야 할 금전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외화표시 한국 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홍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해외 채권시장에서 외화표시채권으로 발행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매입하는 채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 2 채권의 종류



개인도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나요?



개인투자용 국채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일반 개인의 국채 투자는 가능했습니다.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발행시장'은 국가나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최초로 채권을 선보이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국고채는 입찰을 통해 발행되는데, 일반 개인의 경우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대행 입찰의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찰에 꼭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발행된 채권이 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거래소가 개설한 채권시장 또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 직접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증권사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Home Trading System)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일반 개인의 거래 편의성이 많이 개선되어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 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3]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나아가 향후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국채 보유비중(2023년 말 기준): 국내기관 78.1%, 외국인 20.4%, 개인 1.5%(기획재정부, 2024)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일반 국채와 개인투자용 국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 국채와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입니다. 일반 국채의 경우 만기 이전에도 투자자 간에 매매·거래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며, 매도 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매이익을 얻거나 매매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유통시장의 교란 방지를 위해 특수한 경우[4]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즉,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매매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입 시점 1년 후부터 중도 환매(해지)[5]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국채는 만기 전에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6]하나, 개인투자용 국채는 이와 달리 만기 전에 이자를 별도로 수령할 수 없고 만기일에 원금과 표면금리 + 가산금리[7]에 연복리가 적용된 이자를 일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중도 환매 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원금과 해당 기간의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유동성(환금성)을 중시하고 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 실현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입하기 전에 본인의 성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의 수익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는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표면금리만큼 지급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자본소득은 채권의 가격 변동에 의한 시세차익, 또는 매매차익 등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채권의 경우 표면금리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만 세금을 내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통한 실질수익은 '(이자 - 세금) + 매매차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역관계(inverse relationship)가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은 채권을 살 때 지급받기로 약속된 이자율(표면금리)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시장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즉, 시장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역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년 후에 액면에 표시된 100만 원과 연 10%(표면금리)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A 채권을 10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갑자기 시장 이자율이 20%로 올랐다면? A 채권을 구입할 당시 가격인 100만 원에 이를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유사한 채권은 20%의 이자율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A 채권을 팔기 위해서는 100만 원보다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합니다. 이런 직관적인 이유로 시장 이자율과 채권의 가격은 역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 상속·유증·강제집행
5) 일종의 해지 과정으로,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국채의 만기 전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
6) 정해진 단위 기간마다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을 '이표채'라고 함.
7) 금리 상황에 따라, 즉 표면금리가 너무 낮은 경우, 조금 더 금리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덧붙이는 금리(한국경제TV, 2024.9.27)

다른 나라에도 개인투자용 국채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용 국채와 같이 개인투자자에게 저축 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국채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저축 채권(U.S. Savings Bonds)',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저축 채권(Singapore Savings Bonds)', 일본에서는 '개인용 국채(個人向け国債)'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저축 채권
(U.S. Savings Bonds)



일본

개인용 국채
(個人向け国債)



싱가포르

싱가포르 저축 채권
(Singapore Savings Bonds)

미국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로 1935년 대공황 시기에 개인투자용 국채를 최초로 발행하였고, 일본은 2003년부터, 싱가포르는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도입 목적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상품을 보유한 국가도 있고 보유 시 혜택이나 중도 환매 시 불이익 등의 내용에서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축 수단으로 보면 정기예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무엇이 다른건가요?

은행 정기예금과 개인투자용 국채는 모두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성 상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예금과 채권이라는 것 외에 크게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우선, **만기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편입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가 길어야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는 5년, 10년, 20년으로 훨씬 더 깁니다. 또 다른 차이로 **분리과세 혜택**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즉, 올해 1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8] 대상이 되어, 초과분에 대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만 따로 세금을 매길 때보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세금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 시 1인당 매입금액 2억 원까지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5.4%) 혜택[9]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금융소득(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제외)의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9)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그리고 **예금자보호 적용대상 여부와 원리금 보장의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10]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돈을 떼일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도 국채인만큼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고 예금자보호제도와 달리 보장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리와 복리가 있습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복리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이자율이라도 만기 시에 복리가 단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만기가 길수록 복리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70의 법칙

'70의 법칙'이란 복리의 이율을 적용했을 때 어떤 금액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법칙입니다. 다음의 식에 해당 이율을 대입하면 됩니다.

70 ÷ 연이자율(%) = 자산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년)

예를 들어, 이 법칙을 적용해 연 3.5%의 복리 이자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1천만 원을 예치했을 때, 그 2배의 금액인 2천만 원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면 20년(=70 ÷ 3.5)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약 20년 2개월이 걸리며, 이자율이 높을수록 오차는 커지게 됩니다. 즉, 이 법칙은 근삿값을 구하는 것이며 70이 아니라 72를 이자율로 나누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법칙은 저축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이나 인구 증가에 관한 계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어떤 상품이고, 누가 사면 좋을까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안정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저축성 채권입니다. 상품은 5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의 세 종류로 구분되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일괄 지급됩니다. 또한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와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채와 달리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여 중도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매입 1년 후부터 중도 환매(해지)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까지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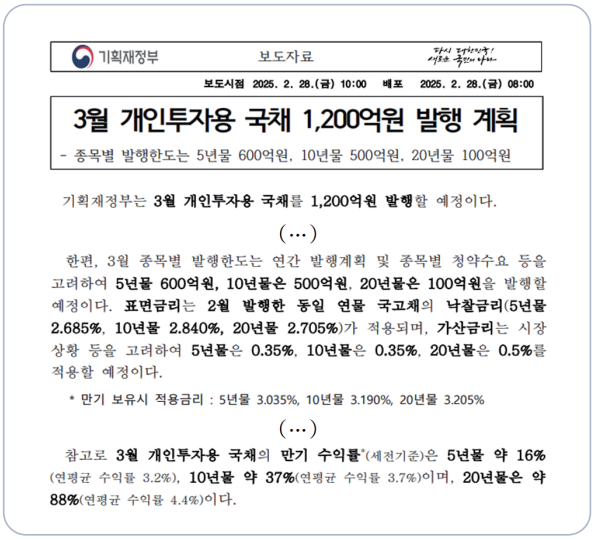
10) 2025년 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금융위원회, 2024.12.27)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여윳돈을 만기까지 어떻게 투자할지 크게 신경 쓰기 싫거나 목돈을 원금 손실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 자녀 학자금 또는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오늘 공부한 여러 개념을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11]하고, 본인의 성향과 현재의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수단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임효상 KDI 전문연구원
hyosang@kdi.re.kr

그림 3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예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28.(금) 10:00 배포 2025. 2. 28.(금) 08:00

3월 개인투자용 국채 1,200억원 발행 계획

-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 600억원, 10년물 500억원, 20년물 100억원

기획재정부는 **3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2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

한편, 3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연간 발행계획 및 종목별 청약수요 등을 고려하여 **5년물 600억원, 10년물은 500억원, 20년물은 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2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85%, 10년물 2.840%, 20년물 2.705%**)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물**은 **0.35%**,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할 예정이다.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 : 5년물 3.035%, 10년물 3.190%, 20년물 3.205%

(…)

참고로 **3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5년물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 약 37%**(연평균 수익률 3.7%)이며, **20년물은 약 88%**(연평균 수익률 4.4%)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5.2.28.

11) 매월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종목별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 만기 수익률, 발행한도 등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참고문헌

국민일보, 「"2배로 돌려드립니다… 20년간 한국에 투자하세요"」, 2024.5.31.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합니다」, 보도자료, 2024.12.27.
기획재정부, 「2025년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보도자료, 2025.2.28.
기획재정부, 『국채 2023』, 2024.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6월 발행계획」, 보도자료, 2024.5.30.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고시 개정 추진」, 보도자료, 2025.1.22.
한국경제TV, 「'금리 인하기', 개인투자용 국채 사도 될까요?」, 2024.9.27.

개인만 살 수 있는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

01

2024년 6월 발행을 시작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개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②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
④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도 환매가 가능하다.
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 상품이다.

02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발행주체가 정부인 채권을 국채라고 한다.
② 법으로 정해진 주체만이 발행할 수 있다.
③ 새로운 채권이 발행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한다.
④ 한국 정부는 1950년에 최초로 국채를 발행했다.
⑤ 액면금액, 표면금리, 만기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03

연 5%의 복리 이자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100만 원을 예치했을 때, 200만 원이 되기까지 대략 몇 년이 걸릴까요? ('70의 법칙'을 활용해 보세요)

① 5년 ② 10년 ③ 14년
④ 15년 ⑤ 20년

04

국고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국채 중 발행물량이 가장 많다.
② 한국 자본시장의 지표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③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④ 개인이 투자할 수 있다.
⑤ 원금과 이자의 지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한다.

05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① 내려간다.
② 올라간다.
③ 변하지 않는다.
④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⑤ 밝혀진 바 없다.

정답 01③ 02③ 03③ 04⑤ 05①

키워드 일반은행,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디지털 금융

금융과 IT의 융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 금융 거래를 시작한 청소년 절반가량이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전용 유스앱을 통해 처음 거래를 시작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부모님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 용돈 통장을 만들던 세대가 지나가고, 애초부터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 성향이 강한 미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
> 출처: 헤럴드경제, 2023.8.26.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지문이나 얼굴 인식만으로 간편하게 송금을 하며, 다양한 '페이'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모습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에 친숙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디지털 금융 환경에 더욱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조사[1]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첫 금융 거래를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통해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금융 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과 IT의 융합이 어떻게 우리의 금융 생활을 바꾸어놓았는지,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도입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과 IT의 융합, 핀테크

교육과정

- 중학교 「사회2」 경제생활과 선택
-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

예전에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직접 창구로 가야 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고 통장과 신분증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던 모습은 점차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핀테크(FinTech)**의 발전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통칭합니다. 핀테크는 지급결제나 송금 부문을 시작으로 크라우드펀딩, 가상자산 거래,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금융 소비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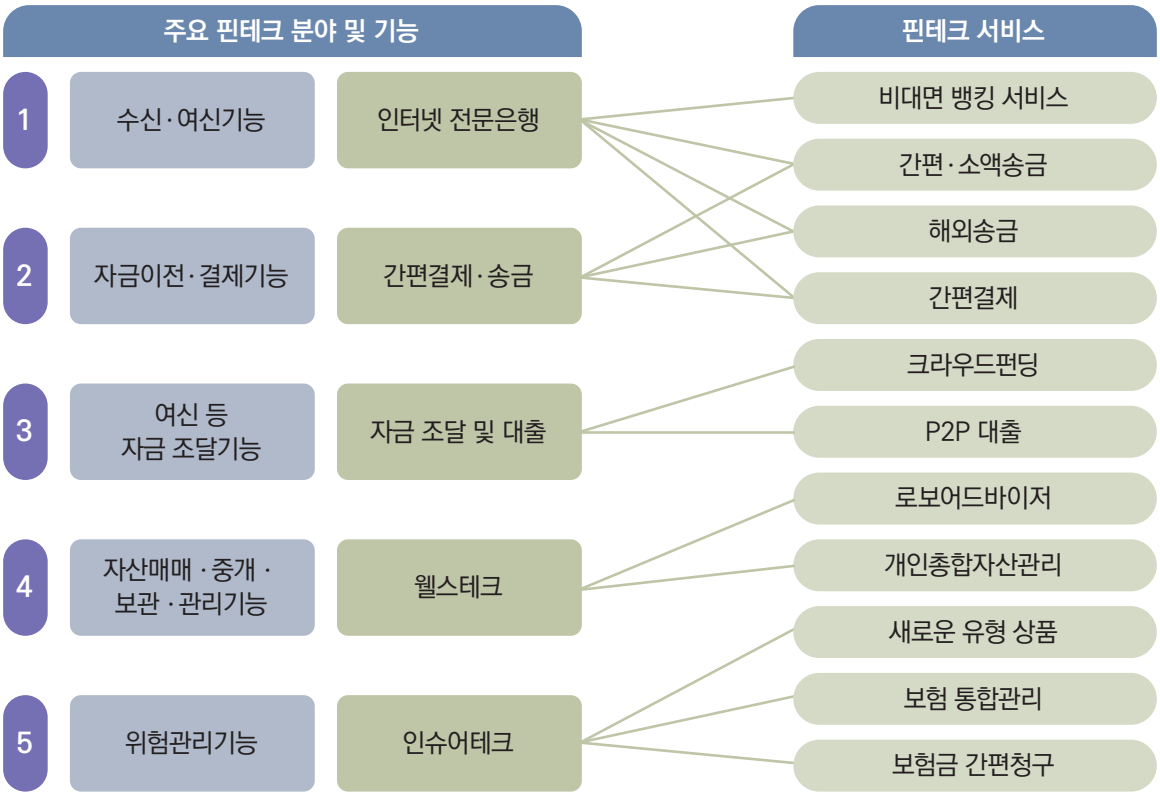
1) 하나금융연구소, 「잘파세대의 금융 인식과 거래 특징의 이해」, 2023.8.30.

금융과 IT의 융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중개 과정을 한층 효율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거래 과정이 간소화되고,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금융 시장의 구조 전반에도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핀테크를 통해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융 기관과 금융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도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층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금융 기관이 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융상품 선택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금융 거래나 소비 패턴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신용도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금융상품의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금융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림 1 주요 분야별 핀테크 서비스



출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삼정KPMG, 2020; 금융감독원, 2024.2. 자료를 재구성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IT와 금융의 융합 트렌드가 확산되고, 금융 서비스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급속히 재편되자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핀테크의 주요 서비스 중 비대면 뱅킹 서비스, 간편·소액송금, 해외송금, 간편결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었습니다.

〈핀테크 관련 용어 정리〉

- **웰스테크**: 자산을 뜻하는 웰스(wealth)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자산관리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자산관리를 의미
- **인슈어테크**: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 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지칭
-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 **P2P(Peer to Peer) 대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대출신청자에게 전통적인 금융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출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
- **로보어드바이저**: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모바일 기기나 PC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왜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었을까?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리적 점포 없이 PC와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은행 업무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들과 서비스 제공 내용은 유사하지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과 차이가 있습니다.[2)]

2015년, 정부는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은행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도 있었을 텐데, 왜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도입하려 했던 것일까요?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한 배경에는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있었습니다.[3)]

첫째,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입니다. 물리적인 지점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점포 기반의 영업 방식은 기존 은행에 비해 운영 비용을 크게 줄여, 고객들이 보다 저렴한 금리와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거래 실적이나 신용평가회사의 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 거래 정보와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하여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는 등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신용대출[4)]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econedu.go.kr/user/playEcon/currEconTermDoc/menu/list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2015.6.18.
4) 중금리대출의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금융위원회, 2021.4.26)

둘째, **은행 산업의 경쟁 촉진**입니다. 새로운 경쟁자와 차별화된 사업 모델의 등장이 은행 간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 개선에 힘쓰게 되어 은행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나아가 국내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도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2017년, 첫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케이뱅크는 통신사 KT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주도했고, 카카오뱅크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빠르게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간편송금 서비스로 잘 알려진 토스가 토스뱅크를 출범시키며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림 2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영업 시점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2024.10.7.

이들 은행은 공통적으로 간편한 비대면 계좌 개설, 직관적인 앱 디자인, 쉬운 금융 용어의 사용 등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모으기', '빌리기', '갚기' 등 일상 언어를 활용한 서비스는 금융에 대한 거리감을 줄였고, '모임통장'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상품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히 새로운 은행이 아니라, 전체 금융 산업의 변화를 유도한 촉매제로 작용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은행

금융은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자금이 남고, 다른 누군가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융 행위는 이러한 불균형을 조절해 소비와 기업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기관은 자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며,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과 IT의 융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은 대표적인 금융 기관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여유 자금을 맡기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은행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은행과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예금·대출 및 지급결제 업무를 고유업무로 하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분류됩니다. 시중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고, 지방은행은 광역시나 각 도 등에 설립된 은행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국내 예금보다는 본국 본점으로부터 들여온 자금으로 영업을 펼쳐 왔고, 우리나라가 외화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업무 범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었지만, 금융 자유화가 진전되면서 현재는 국내은행과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5)]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은행은 산업 개발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담당하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금융을 제공합니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각각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 중점을 둔 은행입니다.

최근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은 현행 은행법상 일반은행으로 분류됩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도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로서, 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2025년 9월부터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



그렇다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당시 기대했던 효과는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되었을까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효과를 평가한 최근의 한 보고서[6)]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대면 금융 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반의 접근성과 사용성은 전통적인 은행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도입 초기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도 금융당국이 개선방안[7)]을 마련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대안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고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8.

6) 한국금융연구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24.9.

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혁신적 포용금융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중 · 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2021.5.

반면, 금리 경쟁력이나 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 등의 측면에서는 도입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높은 예금 금리로 주목받았지만, 이후에는 금리 수준이 타 은행과 유사하거나 대출 금리가 더 높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는 여전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은행 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우리가 마주한 과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논의될 정도로 디지털 금융의 확산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금융 생활을 한층 편리하게 만들었고,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금융 활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면만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금융에 익숙해지는 속도만큼, 화폐의 기본 개념이나 경제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채 금융 활동을 시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돈이 나오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모바일 간편결제나 송금 기능에만 의존해 실제 돈의 흐름을 체감하지 못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금융사기나 신용불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중심의 금융 환경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은행 영업점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조차 누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디지털 금융의 편리함을 누리되, 그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성과 부작용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금융에 대한 기본 이해와 책임 있는 태도를 함께 갖춰야만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임효상 KDI 전문연구원
hyosang@kdi.re.kr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제4판)』, 2024.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2015.6.1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혁신적 포용금융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2021.5.
금융위원회,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관련 QA」, 보도자료, 2021.4.26.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econedu.go.kr/user/playEcon/currEconTermDoc/menu/list
자본시장연구원,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2024.10.7.
하나금융연구소, 「잘파세대의 금융 인식과 거래 특징의 이해」, 2023.8.30.
한국금융연구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2024.9.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8.
한국핀테크지원센터·삼정KPMG, 『한국 Fintech 동향 보고서』, 2020.
헤럴드경제, 「"누가 은행가서 통장 만들어요?" 청소년 절반은 '인뱅'으로 금융 거래 시작」, 2023.8.26.

금융과 IT의 융합이 만들어낸 새로운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01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CT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통칭하는 말은?

□ □ □

02

다음 중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이나 PC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지 않는다.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④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이 대표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이다.
⑤ 인터넷전문은행도 현행 은행법상 일반은행으로 분류된다.

03

다음 중 핀테크로 인해 가능해진 서비스가 아닌 것은?

①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송금
②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③ QR코드를 통한 간편결제
④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송금
⑤ P2P 대출 플랫폼을 통한 직접 대출

04

다음 중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편의성 향상
②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 동력 확보
③ 대면 창구 업무를 늘리기 위한 영업점 확대
④ 기존 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전체 금융 산업의 혁신 유도
⑤ 온라인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저신용자에게 기회 제공

05

다음 중 핀테크 관련 용어와 그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인슈어테크 – 대형 마트의 물류 시스템 자동화 기술
② 웰스테크 – 자산관리와 기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자산관리
③ 로보어드바이저 – 로봇이 자동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기계
④ 크라우드펀딩 –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
⑤ P2P 대출 – 정부가 직접 청년에게 대출을 해 주는 제도

06

다음 중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우려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고령자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금융 접근성 저하
② 비대면 거래로 인해 금융 사기 피해 가능성 증가
③ 게임처럼 돈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경제 관념 확산
④ 은행의 영업점 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
⑤ 농어촌 지역의 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 불편 심화

정답 01 핀테크 02③ 03④ 04③ 05② 06④

K-아파트 이야기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2024년 말, 걸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APT.)'라는 노래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는 '아파트'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로제는 이 곡을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아파트 게임'에서 착안해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노래의 인기에 힘입어 1980년대의 인기 가요인 윤수일의 '아파트'도 다시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흔히 대중가요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의 K-팝까지 반복적으로 노래의 소재로 등장한 아파트.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늘 관심을 이끈 대상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아파트(K-아파트)의 탄생

교육과정
- 중학교 「사회2」 경제생활과 선택
-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

아파트란 공동주택 양식의 하나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1] 경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자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정된 토지 위에 주택을 대량으로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에는 아파트가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1930년대부터 단독 건물 또는 소규모의 형태로 건설되다가, 1960년대부터는 오늘날 아파트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단지형 아파트(여러 동의 아파트가 모여 하나의 단지를 이루는 형태의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아파트의 시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는 1962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대한주택공사(약칭: 주공)가 건립한 '마포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당초 10층으로 계획되어 엘리베이터와 중앙집중식 난방,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당시로서는 최고급의 초현대식 아파트로 구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당시 전력과 기름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으로, 난방은 가구별 연탄보일러로 변경되는 우여곡절 끝에 총 10개 동 642가구의

그림 1 마포아파트 항공사진(1963년)



출처: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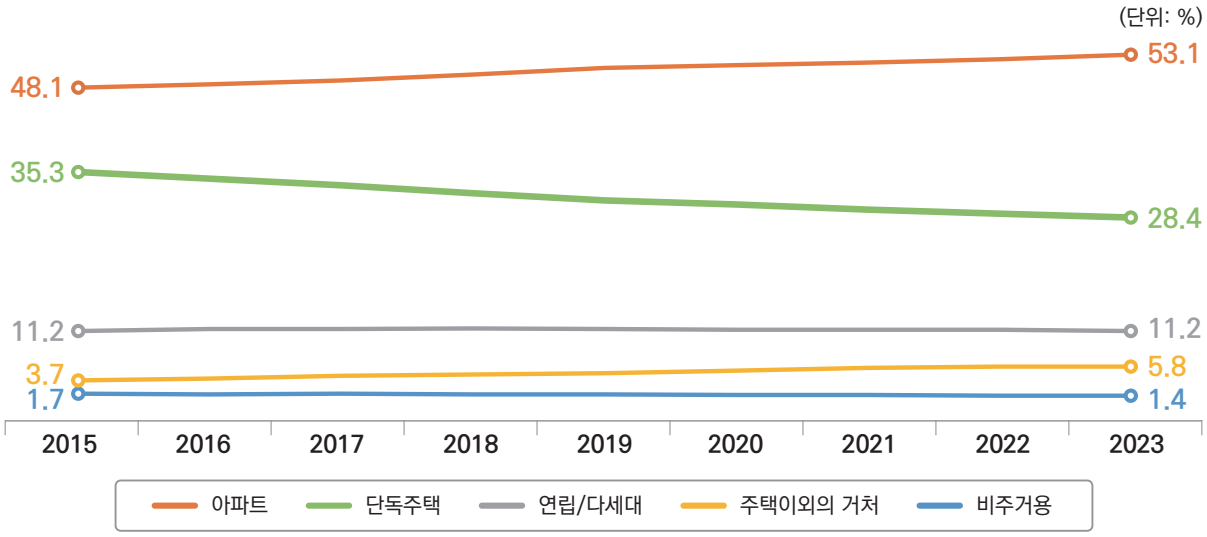
1)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단지가 탄생하였습니다.[2] 준공 초기에는 비싼 가격과 생소한 주거 형태로 인해 입주율이 절반도 안 될 만큼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재력 있는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하고, 쾌적한 주거지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입주 희망자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는 유행처럼 번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8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즉, **두 집 중의 한 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이 수치는 상승세를 이어가 가장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기준 53.1%의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독주택(28.4%), 연립/다세대(11.2%) 거주 가구 비율을 크게 앞서는 수치로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78.0%)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25.7%)입니다.

그림 2 거처종류별 가구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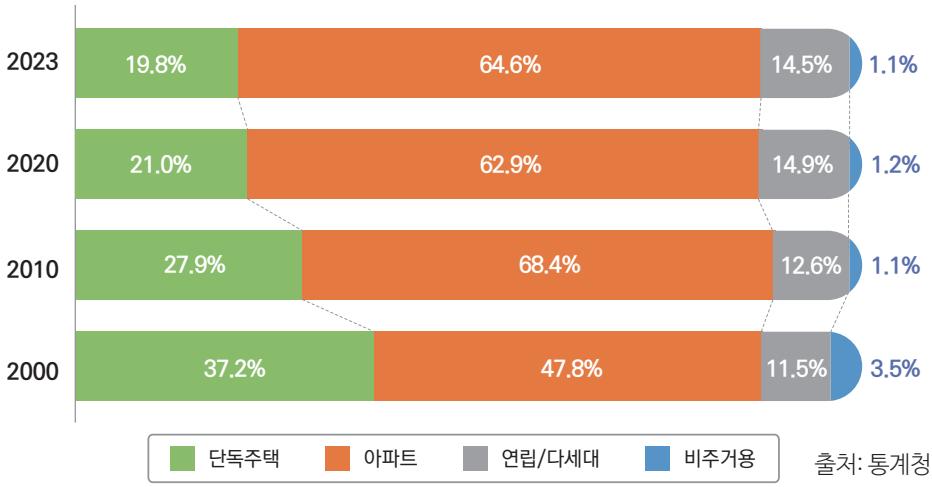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4.7.29.

그럼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있을까요? 아파트가 포함된 주택 종류 통계는 1975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아파트의 비율이 1.9%에 불과했고 반면 단독주택의 비율은 92.6%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여 년이 지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총주택 1,955만 호 중에서 아파트는 1,263만 호로 전체의 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아파트 편」, 2016.

그림 3 주택 종류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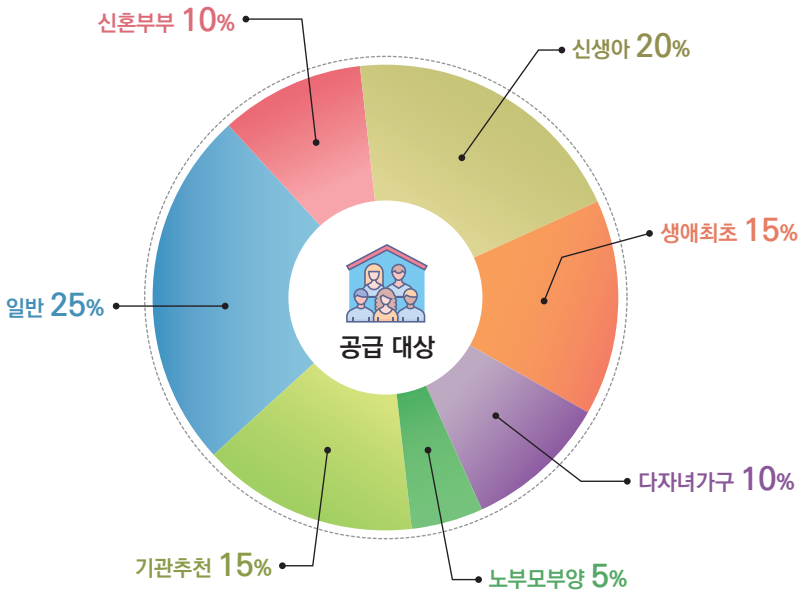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4.7.29.

주거 공간으로서의 아파트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 세 가지로 의식주를 꼽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공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재입니다. 그런데 서민이나 주거 빈곤층, 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이 아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계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공공 재정이나 기금을 통해 직접 아파트를 지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나 공공임대 아파트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저금리의 전용 대출 상품을 만들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돕고 있습니다.

그림 4 공공분양(일반) 주택의 공급 대상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일반) 공급 대상」, 2024.

한편 오늘날 아파트는 세대별 주거 공간 뿐만 아니라 단지 내 공원과 같은 녹지 시설, 입주민 편의시설(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 경비 및 보안 서비스 등을 갖추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거 형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산으로서의 아파트

아파트는 주거 공간일뿐만 아니라 가계의 주요 자산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으로서의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에 달하며, 전·월세보증금까지 포함한다면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은 77.3%로 매우 높습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가구의 거처 형태나 주택 종류별 구성비를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자산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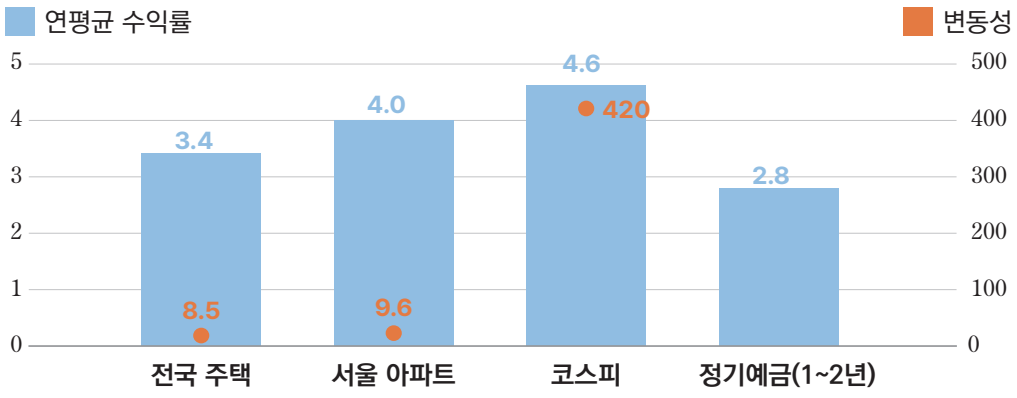
표 1 가구 자산 유형별 보유액 및 구성비(2024년)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거주 주택	거주주택 이외	기타실물 자산
평균(만 원)	54,022	13,378	9,710	3,668	40,644	38,084	22.692	15,393	2,560
구성비(%)	100.0	24.8	18.0	6.8	75.2	70.5	42.0	28.5	4.7

출처: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4.12.9.

한국은행이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3]에 의하면 2006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16년간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수익률은 4.0%로 정기예금(2.8%)보다 높았고, 같은 기간 코스피(KOSPI)의 연간 수익률(4.6%)보다는 다소 낮지만 가격 변동성은 훨씬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주식과 예금 등 국내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위험은 낮고 가격 상승률은 높은 투자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는 구조 및 입지의 동질성이 높아 매매가 쉽게 이루어져 자산으로서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5 자산종류별 상승률 및 변동성(2006년 1분기~2021년 3분기)



출처: 한국은행, 2022.5.23.

3) 한국은행,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 2022.5.23.

그런데 단순한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빚을 내면 금융 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파트 시장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출 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구입 자금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금융 기관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4] 금융 기관은 이렇게 큰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나 대출자의 신용 등을 꼼꼼하게 따져 이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의 규제 지역을 설정하여 대출 조건을 강화하거나,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이나 상한선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대출 규제는 주로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의 상한을 조정하여 이루어집니다. LTV는 담보물인 주택 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 DTI는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구입을 희망하는 아파트의 시세가 5억 원이고 LTV가 50% 적용되고 있다면 대출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대출 상환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주택 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 이러한 비율을 더 낮춰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반대의 경우 비율을 상향 조정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이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한 '스트레스 DSR' 제도가 마련되어 단계별로 실행되고 있습니다.[5]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이자 정부 정책의 핵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빠르게 쏟아지고 시장 상황도 급변하는 만큼,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나와 무관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집을 구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효상 KDI 전문연구원
hyosang@kdi.re.kr

4) 2025년 1분기 가계대출 잔액 1,810.3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개별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집단대출의 합) 잔액은 1,133.5조 원으로 62.6%를 차지하고 있음(한국은행, 2025.5.20.).

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5.20.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아파트 편」, 2016.,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apartment.do

국가기록원, 「마포아파트 항공사진(1963 촬영)」, https://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5114523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5.20.

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 보도자료, 2024.7.29.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12.9.

한국은행,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 2022.5.23.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가계신용(잠정)」, 보도자료, 2025.5.20.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일반) 공급 대상」, 2024., https://www.lh.or.kr/main/img/sub/graph_img2_1.png

01

다음 중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정의한 아파트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3층 이상의 건물
② 단독주택과 동일한 구조
③ 한 건물에 한 가구만 거주
④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
⑤ 주거가 아닌 상업 용도로만 사용

02

다음 중 '디딤돌대출' 제도가 목표로 삼는 계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소득층
② 무주택 서민
③ 다주택 투자자
④ 고급주택 보유자
⑤ 상업시설 임대업자

03

아파트에 적용되는 대출 관련 지표 중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① DSR ② DTI ③ LTV
④ CPI ⑤ LTI

04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택 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② 산업화와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 지역의 주택 부족
③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④ 농촌 지역 개발의 확대
⑤ 고층 건물에 대한 규제 강화

05

홍길동 씨가 연소득 5,000만 원일 때,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 원,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200만 원이라면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얼마인가?

① 24% ② 26% ③ 28%
④ 30% ⑤ 32%

06

아파트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
②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 것
③ 금리를 무제한으로 인하하는 것
④ LTV(담보인정비율)를 낮추는 것
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

정답 01④ 02② 03① 04② 05③ 06③

우리 동네에 도로, 철도, 공연장을 지어주세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지난밤 9시 뉴스에서 우리 동네와 옆 동네를 잇는 다리의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옆 동네이지만 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 늘 멀리 돌아가야만 했던 길을 이제는 다리를 통해 훨씬 편하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길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겪었던 심한 교통 체증도 줄어들 수 있고요. 여러모로 우리 동네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런데, 이런 다리뿐만 아니라 광역을 통과하는 도로나 전국을 이어주는 철도가 어디에 놓일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러한 인프라를 필요로 할 텐데, 무엇을 먼저 지을지 어떻게 정해질까요? 또 이런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할 텐데, 정부나 지자체는 어떻게 그 예산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으니까

교육과정

- 중학교 「사회2」 경제생활과 선택
- 고등학교 「경제」 경제학과 경제 문제

우리가 매일 20분씩 걸어서 등교하는 상황이라면, 무더운 여름에 한 번쯤 '자전거라도 사서 타고 다닐까?'하는 생각이 들겠죠? 자전거를 사려면 돈이 들지만, 학교에는 훨씬 일찍 도착할 수 있고, 쌩쌩 달리는 동안에는 시원하기도 할 테니 자전거를 살지 말지 고민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 행동을 함으로써 드는 '비용(cost)'**과 **그 행동을 통해 얻게 되는 만족이나 이득인 '편익(benefit)'**을 알게 모르게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자원은 제한적이고 우리는 그 제한 속에서 가장 나은 선택을 하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럼, 위의 상황에서 자전거를 살지 말지 결정할 때 생각해 볼 비용과 편익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전거를 사고, 이 자전거에 바구니도 달아주고, 타이어가 펑크 나면 타이어를 갈아주는 것들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더 일찍 도착하거나 시원하게 등교할 수 있는 것은 편익이죠. 결국 자전거를 샀을 때의 얻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본 후,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자전거를 살 것입니다.

다시 서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도로와 철도, 공공의료기관, 체육시설, 공항 등의 개발은 대부분 정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죠. 전국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공공시설과 인프라를 자신의 지역 내에 갖추길 원하고,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럼, 정부는 지역의 모든 요구를 수렴해서 많은 시설과 인프라를 마음껏 지어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마다 그 필요에

언제든 응할 수 있도록 부지(땅)와 돈, 그리고 시간이 항상 여유롭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선택의 순간에 마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는 '이 사업이 투자가치가 있을까'를 자세히 따져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죠. 마치 앞서 우리가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한 것과 같이, 국가도 **사회적인 이득이 사업을 위해 드는 비용보다 더 큰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투입될 사업들과 그 순서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그 존재의 이유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정부에서 3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 전에 재정을 어떻게 쓸지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예타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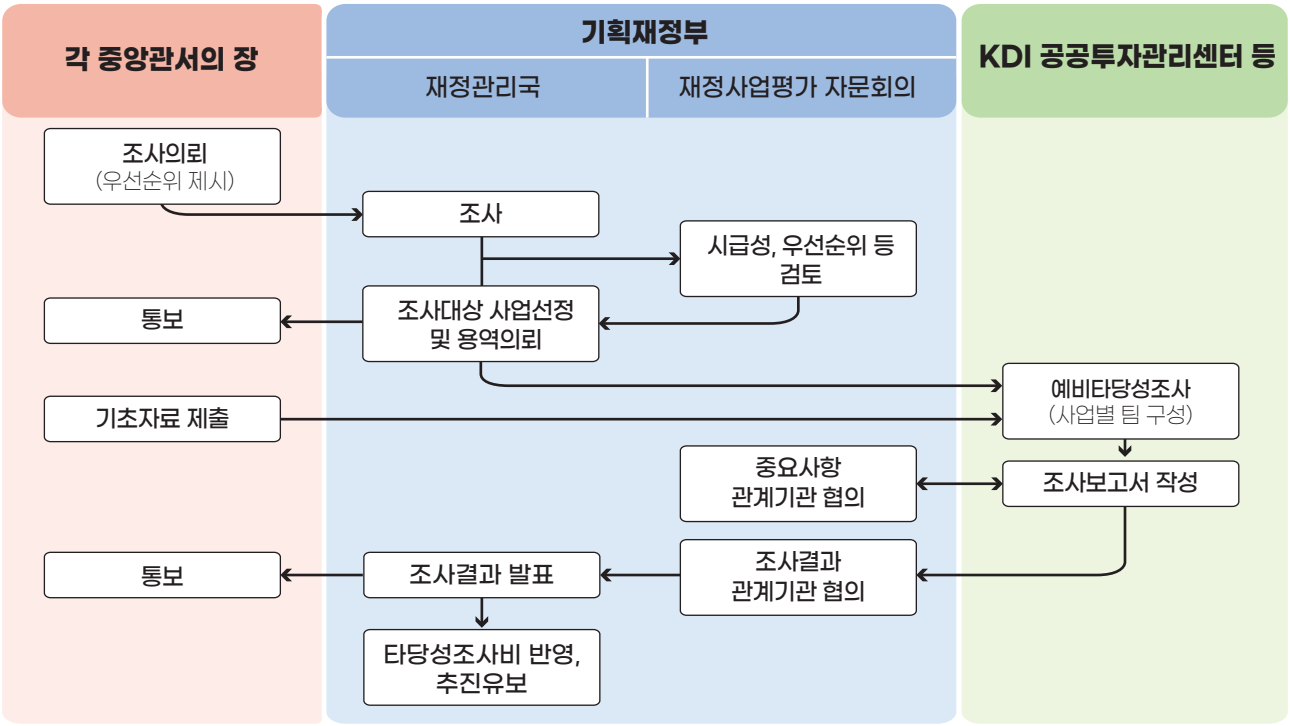


예타 과정은 사업의 쟁점 파악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이 이루어질 지역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연관이 있는 주변 계획도 검토하면서 여러 사업 간의 조화와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서 기술, 비용, 편익 등을 고려할 때 쟁점이 될 사항을 짚어 조사의 기초를 다집니다. 다음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와 편익, 비용을 수치로 환산해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제성 분석,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책의 일관성, 사업 준비 정도, 고용효과 등을 평가하는 정책성 분석, 지역의 낙후 정도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지표를 통해 보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거칩니다. 이러한 평가 항목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종합평가를 내립니다.

이러한 예타 과정을 거치면,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공정하게 결정됩니다. 덕분에 정부는 한정적인 재원, 즉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해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한 기준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이 예타를 거쳐 그 사업성을 평가받는 모든 과정은 그림 1 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문화시설이나,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와 철도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어지는 것입니다. 즉, 일상에서 사용하는 시설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결정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림 1 한 사업의 예타가 진행되는 전 과정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 선정 및 수행체계」

세금을 쓰는 모든 사업이 예타의 대상일까요?

대규모 재정사업은 예타를 통해 그 사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따져보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예타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법에 따라 일부 사업은 예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사업'으로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 정부 청사나 초·중학교, 교도소 같은 공공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는 예타를 하지 않아도 돼요. 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 관련 사업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을 복구하거나 위험한 시설을 긴급히 보수해야 할 때도 예타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 노후된 상수도나 도로를 고치는 단순 개량이나 유지보수도 면제사업입니다. 이외에도 경기가 침체되는 등 긴급한 사회·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처럼 꼭 필요한 정책사업도 예타를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이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예타 면제는 '꼭 필요하고, 시급하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제 역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한 후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타 면제도 세금이 아깝지 않게 쓰이도록 신중하게 결정된답니다.

경제적·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숫자가 되나요?

지금까지 예타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예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투자가치, 즉 경제적·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예타에서의 **경제성 분석**은 말 그대로 이 사업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 경제성을 수치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숫자가 아닌 것들을 이미 연구된 참고치를 활용해 하나씩 객관적 기준으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죠. 이를 통해 사업이 만들어내는 편익과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사업성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먼저,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로의 사용량을 예측합니다. 이때 기존의 교통량 자료, 인구 성장률,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 등을 바탕으로 수요를 계산합니다. 이 예측은 단순히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와 통계, 예측 모형을 활용하고 '앞으로 하루에 몇 대의 차량이 지나갈 것인지', '몇 명이 이 경로를 이용할 것인지' 등을 숫자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수요가 파악되면, 이 도로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주게 될지 계산합니다. 도로가 새롭게 생긴다면 차가 덜 막히고,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절약한 시간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편익의 수치화입니다. 즉, 한 사람이 1시간을 절약하면, 그 시간의 가치를 평균 임금이나 활동 가치로 환산해서 '1시간 = 약 2만 원의 가치'처럼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로 건설에 따라 줄어드는 차량 유지비, 연료비, 사고 위험 등이 모두 금액으로 환산돼 편익에 포함됩니다(아래 표 1 참고). 눈에 보이지 않던 이익들이 이렇게 하나씩 숫자가 되어 나타나죠. 그리고 비용을 파악합니다. 도로를 짓는데 드는 모든 공사비, 땅을 사는 데 드는 비용,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 도로를 운영하게 될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들어갈 비용을 빠짐없이 따져야 하죠. 그렇게 환산된 비용(C)과 편익(B)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시간은 흐른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편익은 사업이 완공된 이후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발생하고, 비용은 주로 사업 초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에서는 이를 일관성 있게 비교하기 위해 **'현재가치'**라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미래에 발생하는 모든 돈을 지금 시점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얻을 100억 원의 이익이 지금의 100억 원과는 그 가치가 다르겠죠?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할인율'이라고 하는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그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가치를 계산해서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편익의 현재가치가 클 때, 경제적으로 이익이 남는다고 평가하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이 과연 그만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표 1 도로·철도 부문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구분	편익 항목	
공통 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 교통사고 감소편익	• 통행시간 절감편익 •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 절감편익
사업특수 편익	• 주차비용 절감편익 • 철도부문 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負)의 편익	•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負)의 편익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1.5.

숫자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과 편익의 수치화로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았다면, **정책성 분석** 단계에서는 그 사업이 정부의 정책 목표나 사회적인 가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봅니다. 한 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여건과 사업이 가져오는 정책적 효과, 사업이 진행되며 가져올 일자리의 효과나 생활 여건에 대한 영향 등이 그 세부적인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을 최상위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 시에서도 이에 따른 관련 계획들을 추진 중이라면, 해당 시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대중교통 확대 사업은 정책 방향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정책성 분석은 숫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국가의 비전, 사회적 요구,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추가됩니다. 원래의 경제성 분석의 구조대로라면, 지역발전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낙후된 지역일수록 타당성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에 비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사람이 적은 지역에서는 수요도, 수요를 고려해 계산한 편익도 당연히 작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 국가 정책을 평가에 반영하여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고, 사업을 통해 나타날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이죠. 이를 활용해 낙후 지역에서 수행되는 사업이 해당 지역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면 일종의 가점을 부여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 과정입니다. 이 분석 덕분에 단순히 경제적 수익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의 미래와 연결된 사업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공공시설, 기반 시설이 우리 지역에 지어지는 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모든 과정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죠. 단순히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할 것 같다'라는 감이 아니라, 수요와 편익, 비용을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어보고, 그 숫자들을 바탕으로 비교하면서, 사회적인 가치들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 이 사업이 정말로 할 만한지, 우선순위는 어디쯤인지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성을 숫자로 판단하는 과정은 단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큰 비용이 들더라도 그 사업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누리게 될 편익을 고민해 보게 되는, 결국 '공공의 이익'을 추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타의 경제성 분석은 그래서 단순한 수익의 크기보다는 사람과 삶을 중심에 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유영 KDI 전문연구원
ykim@kdi.re.kr

참고문헌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기획예산처훈령 제1호, 2026.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5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2025.6.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2021.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 – 선정 및 수행체계」, https://pimac.kdi.re.kr/about/validity.jsp

우리 동네에 도로, 철도, 공연장을 지어주세요!

01

다음 중 예비타당성조사의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이미 결정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② 타당성을 주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③ 건설 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④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⑤ 사업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02

다음 문항을 읽고 맞는 것에 ○하세요.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만이 조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 ×)

◇ 도로 건설로 인해 절약되는 시간이나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편익'에 포함된다. (○ / ×)

◇ 미래의 이익은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의 가치로 바꾸어 비교한다. (○ / ×)

03

다음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② 정부 지원금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
③ 민간 기업이 요청한 사업이면 모두 해당
④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
⑤ 주민 서명이 1만 명을 넘는 사업

04

다음 중 정부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예타 평가에 포함시키는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경제성 ② 정책성 ③ 기술성
④ 재정건전성 ⑤ 지역균형발전

05

다음 중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승객이 아낀 통근 시간
② 도로 건설에 드는 자재비
③ 교통사고 감소 효과
④ 지역 주민의 기대감
⑤ 도시 인지도와 이미지 향상

06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하는 '현재가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비교하기 위해서
② 미래에 투자될 비용을 늘리기 위해서
③ 현재 시점에서의 물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④ 비용을 낮추고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⑤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답 01④ 02×○○ 03④ 04⑤ 05② 06①

키워드 예금자보호제도, 뱅크런, 보험의 원리, 도덕적 해이

내 통장 속 돈은 얼마나 안전할까?

-예금자보호법 개정-



우리는 왜 은행에 돈을 맡길까요?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돈을 보관하는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숙제였습니다. 때로는 항아리에 묻어두기도 했고, 때로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기도 했죠. 하지만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거나 실수로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서, '내가 직접 보관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돈을 맡아줄 곳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생긴 것이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은행은 개인보다 훨씬 안전한 보관 시설과 전문적인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는 언제나 유효할까요? 만약 내가 믿고 돈을 맡긴 은행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국가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금자보호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 그리고 그 돈을 지키는 법

교육과정

- 중학교 「사회2」 경제생활과 선택
-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저축과 투자

앞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를 '안전한 보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왜 돈을 모으고, 안전히 보관하고자 했을까요?

우리 삶을 자세히 보면 소득을 얻는 시기와 큰 지출이 필요한 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일 때는 소득이 거의 없지만 등록금이나 학용품 같은 지출이 필요하고, 사회초년생일 때는 월급을 받지만 결혼 자금이나 내 집 마련 같은 목돈이 훗날 필요하죠. 그리고 은퇴 후에는 소득은 줄어들지만 의료비나 생활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이처럼 소득과 지출 시기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돈을 모으게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내 집 마련, 은퇴와 노후 등 수많은 경제적 전환점을 맞닥뜨립니다. 이런 순간마다 삶의 안정성을 지키고 선택의 자유를 갖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소비를 줄이며 미래를 대비하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비의 이연(deferred consump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돈을 모은다는 건 그저 '모아두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의 작은 희생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보관처가 필요하죠. 대부분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예금하고, 그곳이 당연히 안전할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우리는 돈을 모으는 법은 배워왔지만, 은행이 위험해질 때 내 돈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 보호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시작됩니다.

뱅크런의 공포 그리고 예금자보호제도의 탄생

만약 평생 모은 돈을 맡긴 은행이 갑자기 파산한다면, 한순간에 수년간의 노력과 계획이 무너질 수 있을 겁니다. 1930년대 초 미국에서 바로 이런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였습니다. 주식시장 붕괴를 시작으로 은행들이 도미노처럼 연쇄 파산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평생 모은 예금을 잃었죠. 이 기간에 문을 닫은 은행만 해도 무려 9,000곳에 달했습니다. 이런 참상을 목격한 사람들 사이에는 '내가 이용하는 은행도 위험한 것 아닐까?'라는 불안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며 자신의 돈을 찾으려 했습니다. 바로 '뱅크런(bank run)'의 시작이었습니다. 뱅크런은 **사람들이 은행의 건전성에 의문을 품고 예금이 사라질까 봐 앞다퉈 은행에 맡겨 둔 돈을 인출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행이 예금을 그냥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나 대출에 활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갑작스럽게 예금 인출 요청이 몰리자 은행들은 현금을 바로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고 이로 인해 건전한 은행까지도 파산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1933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를 설립했습니다. FDIC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1인당 일정 금액까지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은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만들어 예금자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FDIC 설립은 예금자들에게 '정부가 보장한다'라는 확신과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뱅크런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금융 시스템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예금자보호제도는 1933년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상황에 맞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핵심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아픈 경험이 전 세계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제도적 토대가 된 셈이죠.

노벨경제학상과 뱅크런: 뱅크런은 과연 은행만의 책임일까?



뱅크런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은행이 뭔가 잘못했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실 대출이나 무리한 투자 때문에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하고, 이를 본 사람들이 서둘러 돈을 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뱅크런은 항상 은행의 잘못된 경영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놀랍게도, 건전하게 운영되던 은행도 하루아침에 뱅크런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업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 때문으로, 202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라스 다이아몬드(Douglas Diamond)와 필립 딥비그(Philip Dybvig) 교수가 바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들은 1983년 「뱅크런, 예금보험, 그리고 유동성(Bank Runs, Deposit Insurance, and Liquidity)」이라는 연구를 통해 건전한 은행도 하루아침에 뱅크런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매커니즘을 보여줬습니다.

은행의 핵심 기능은 예금자의 단기 예금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금자들은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은행이 제공한 장기 자금은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과 같이 상환까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예금과 대출의 만기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운영됩니다. 실제로도 평상시에는 일부 사람이 돈을 찾고, 또 다른 사람이 돈을 맡기면서 균형을 유지하죠.

하지만 '뱅크런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만 퍼져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너도나도 돈을 빼기 시작하면 아무리 건전한 은행이라도 갑작스러운 대량 인출 요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실현적 예언'입니다. 뱅크런에 대한 우려 자체가 실제 뱅크런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따라서 뱅크런은 반드시 은행의 잘못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업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뱅크런의 위험을 안고 있는 활동인 셈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다이아몬드와 딥비그 교수는 예금자보호와 같이 예금자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은행업 자체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면, 이를 보완할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IMF 외환위기와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제도

미국이 대공황을 계기로 예금보호 장치를 만들었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예금자보호제도가 실시됐을까요?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도산할 경우를 대비한 예금자보호제도의 도입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었고 **1997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예금자 1인당 2천만 원까지를 보장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절실하게 체감한 것은 그 이듬해 터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당시 외환위기로 인해 수많은 금융 기관이 부실화되고 일부는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1997년 말 33개였던 은행이 18개로 줄어들면서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신화가 무너졌습니다.[1] 이에 '내 예금은 안전할까?'라는 불안감이 전국을 강타했고, 이러한 심리는 멀쩡하게 운영되던 금융회사까지도 뱅크런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맞게 하였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벌어졌던 집단 공포가 1990년대 우리나라에 재현된 것이죠.

정부는 뱅크런 사태가 다른 금융업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했습니다.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기관의 모든 예금을 전액 보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등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전액 보장이라는 강력한 조치 덕분에 금융 시스템의 연쇄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긴급조치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액 보장은 금융 기관과 예금자 모두의 경각심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다시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무려 24년 동안 5천만 원 한도가 유지되다가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인상되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가 상승과 금융자산 증가로 5천만 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죠.

그렇다면 현재 예금자보호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호해 줄까요?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투자 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등 **예금보험에 가입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예금, 자유적금, 보통예금, 정기적금, 퇴직보험, 발행어음[2]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보호 한도인 1억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반면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투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원금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금융 기관에서 여러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합산해서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정기예금 6천만 원, 적금 5천만 원이 있다면 총 1억 1천만 원 중 1억 원만 보호받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금자는 어떠한 재원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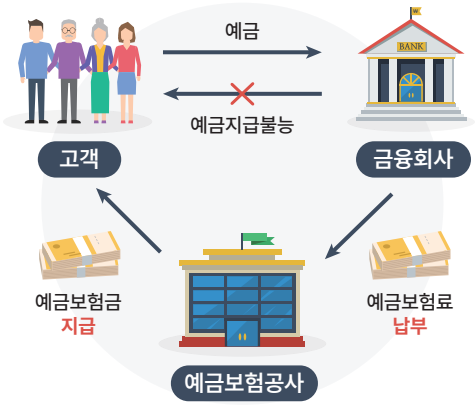
예금자보호제도의 작동 원리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하면 정부가 국민의 돈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보험의 원리'에 기반해서 작동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은 평소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예금자 개인이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의무가입한 금융회사들이 보험료를 납부해 '예금보험기금'이라는 공동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의 핵심 개념과 유사합니다. 같은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각자 보험료를 내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인거죠. 예금자보호제도 역시 특정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회사를 대신해 예금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비은행권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는데, 30개에 달했던 종합금융회사 중 2개만 남았고 증권사 15개와 보험사 20개가 폐업(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참고)
2)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은 이외에도 다양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kdic.or.kr)에서 보호 대상 여부 확인 필요

이런 구조는 '위험 분산'과 '상호부조'라는 보험의 기본 개념에 충실합니다. 먼저 위험 분산이란 개별 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실을 여러 주체가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각자의 위험을 줄이는 원리입니다. 마치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한 명의 피해를 수많은 운전자가 낸 보험료로 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호부조는 같은 위험에 노출된 구성원들이 서로 도와 집단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협력 방식을 말하죠. 결국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 개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 위험을 업계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 셈입니다.



IMF 이후 예금자보호제도 최대의 시험: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 부실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한때 TV 광고까지 내보내며 고금리를 내세웠던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해에만 16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면서 예금자보호제도는 IMF 이후 사상 최대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상황은 극심했습니다. 기존 예금보험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했고 대규모 자금 투입을 위해 정부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사상 첫 예보채※ 발행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들은 전액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자들은 다른 처지에 놓였습니다. 2012년 10월 집계에 따르면 5천만 원 초과 예금자 피해 금액만 5,131억 원, 피해자는 10만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일부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올 9월부터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2011년 당시 보상받지 못했던 예금자들의 상당수가 이제는 전액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4년 만의 보호 한도 상향이 갖는 현실적 의미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예보채: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예금보험기금이 부족할 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예금 전액을 보장해 주면 안되나요?

예금자보호는 왜 일정 금액까지만 보장해 주는 걸까요? 전액을 보장해 준다면 예금자가 더 안심하고 예금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농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험 가입 전엔 화재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건조한 날에는 농작물 소각을 피하고 축사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어차피 손해가 생겨도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이 있다는 이유로 예방을 등한시하고, 사고가 나면 실제 손해는 제3자(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 도덕적 해이 개념을 예금자보호제도에 대입해 볼까요? 만약 예금이 전액 보장된다면, 예금자들은 '어차피 내 돈은 보호받으니까'라는 생각으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금융회사를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을 예치한 후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험한 투자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려는 동기 자체가 약화됩니다.

이렇게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시장 참여자들이 무관심해지고, 심지어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공적 기구가 예금의 전액을 모두 보장해 준다면 금융회사가 긴장감을 잃고, 무리한 자산운용이나 고위험 상품 투자에 나서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예금자보호를 '한도 내에서만' 제공함으로써, 예금자에게는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금융 기관과 예금자 모두가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위기를 미리 알 수는 없을까?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지급불능 상태일 때 예금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가 위기에 빠지기 전에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사후 보상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위기를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금융 기관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순자본비율을 통해 자본을 충분히 가졌는지를 살펴보고, 당기순이익으로 수익성을, 유동성비율로 단기 지급 능력을 각각 점검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만큼 자본이 충분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실자산비율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당기순이익으로 수익성을, 유동성비율로 실제 보험금 지급 상황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각각 점검합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엄격하고 체계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자기자본비율(BIS 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이 있습니다. 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위기 상황에서도 손실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BIS 비율 최소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NPL은 은행이 보유한 대출 중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건전성 지표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또는 각 은행의 경영공시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금융당국과 예금자는 이를 통해 은행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은 건전성 지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선 조치를 내리죠. 결국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런 사전 감시 체계와 함께 예금자를 보호하는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인상으로, 예금자들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금자보호제도의 상향을 둘러싸고 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머니무브' 현상을 예상합니다.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반면 시장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보호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1금융권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으리라는 것이죠. 또 다른 우려도 제기됩니다.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이 비용이 결국 수수료나 대출 금리 인상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특히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자금이 몰려 일부 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업권별 예금보험료 인상률 검토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과연 24년 만의 이번 상향 조치는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임효지 KDI 전문연구원
limhj@kdi.re.kr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예금자보호제도」,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582&sitePage=1-2-1
금융위원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보도자료, 2025.7.22.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econedu.go.kr/user/playEcon/currEconTermDoc/menu/list
보험연구원,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2010.3.
보험연구원, 「보험 산업 미래」, 2017.2.
연합뉴스, 「[이코노워치] 예금보호와 뱅크런의 역학관계」, 2025.5.22.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s://www.kdic.or.kr
한국경제, 「뱅크런 32兆·피해자 10만… 저축銀 PF대출 부실로 드러난 최대 금융비리」, 2019.10.11.

01

다음 중 뱅크런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예금자의 대출 상환이 늦어져 은행이 손실을 보는 현상
② 은행들이 고위험 투자를 확대하여 파산하는 구조적 문제
③ 많은 예금자가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현상
④ 정부가 모든 금융 기관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는 조치
⑤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행위

02

다음 중 소비의 이연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소비를 더 많이 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하는 행위
② 현재 소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행위
③ 소비를 줄여 물가를 낮추는 정부 정책
④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어 시장이 침체되는 현상
⑤ 현재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소비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

03

다음 중 예금자보호제도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단, 보기 속 모든 금융회사는 예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

① 은행의 정기예금
② 증권회사의 주식형 펀드
③ 저축은행의 자유적금
④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⑤ 증권회사의 보통예금

04

예금자보호제도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금보호기금은 사전에 예금보험료를 통해 미리 조성해두는 기금이다.
② 위험 분산이란 개별 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여러 주체가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각자의 위험을 줄이는 원리이다.
③ 상호부조란 같은 위험에 노출된 구성원들이 서로 도와 집단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협력 방식이다.
④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된다.
⑤ 예금자보호제도는 문제가 생긴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자에게 보호 한도 내에 예금을 지급한다.

05

다음 중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① 금융회사가 예금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보호 한도 내 예금을 보장한다.
② 은행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자기자본비율(BIS 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이 있다.
③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된다.
④ 주식, 펀드, 채권 등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예금자보호제도는 1금융권 은행에만 적용된다.

정답 01③ 02② 03② 04④ 05⑤

지금은 바야흐로 해외직구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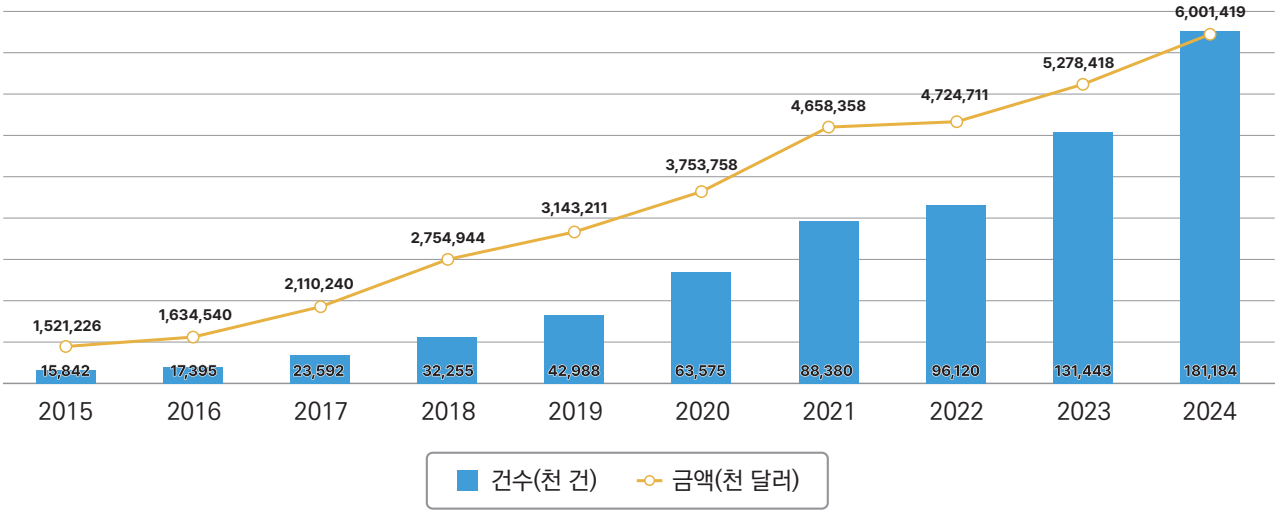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 금액은 55억 2,000만 달러로 1분기(53억 5,000만 달러)보다 약 3.3% 많았다. 이는 해외여행이 감소했음에도 해외직구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1분기 779만 7,000명에서 2분기 676만 7,000만명으로 13.2%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구매액은 1분기 13억 5,000만 달러에서 2분기 15억 5,000만 달러로 15.2% 증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온라인 쇼핑 해외직접구매는 10억 4,000만 달러로 1분기(8억 4,000만 달러) 대비 2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조선비즈, 2025.8.26.

한 뉴스 보도[1]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해외 직접 구매로 거래한 금액이 무려 6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한 교수는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 규모로는 한국이 세계 5위이지만, 인구 대비로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전자상거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셈'이라고 언급했죠. 그리고 2025년 한국은행의 자료에서는 2025년 2분기 동안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금액이 55.2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과 함께, 특히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의 수는 줄었는데 카드 해외 사용 금액이 늘어났다는 점을 흥미로운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자료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인으로 **해외 직접 구매, 즉 '해외직구'**를 꼽았습니다.

그림 1 2015~2024년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1) 조선일보, 「"국내가 더 비싸, 글로벌 호구"... 해외직구는 한국판 '소비자 운동'」, 2024.5.21.

교육과정
· 중학교 「사회2」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화
· 고등학교 「경제」 국제 경제

관세청은 2024년 기준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 건수 즉, 해외 인터넷 쇼핑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수가 전년보다 37.8% 증가, 그 금액은 13.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그림 1 참고). 금액에 비해 건수 증가 폭이 크다는 점을 통해 물건의 개당 단가가 낮더라도 해외직구 물품 수가 늘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 통계 자료에서는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많이 한다는 점을 한결같이 보여줍니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해외직구를 많이 하게 된 걸까요? 여러 배경과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같은 나이키 운동화라도 집 앞 백화점에서는 15만 원에 파는 것을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는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해외직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같은 제품인데 해외직구로는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해외에서 제품이 들어온다면 해당 제품에 관세도 붙고, 배송비도 붙을 텐데 말이죠. 그 모든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해외직구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을 갖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물건에 관세가 붙는 게 아니랍니다

해외직구에는 **관세 정책이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본래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붙는 세금입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기는 것이죠. 마치 놀이공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는 것처럼,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관세라는 입장료를 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소액인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서 행정적 측면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 면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소액 구매에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데,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해외직구 물품의 건수를 기준으로 99%가 이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반면, 동일한 제품이 백화점에 진열될 때는 어떨까요? 수입업체가 정식으로 통관 과정을 거칠 경우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면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물품 가격에 8~20%의 관세가 부과되고, 10%의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더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특정 상품에는 개별소비세*가 추가되기도 해요. 이러한 세금 부담의 차이만으로도 벌써 해외직구와 국내 판매 제품 간에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 단계와 함께 사라지다

해외직구 물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유통구조의 차이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입 유통은 제조업체에서 수입업체로, 수입업체에서 도매업체로,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로의 순으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이러한 다단계 구조를 거치며 단계마다 운송비, 창고비, 인건비, 그리고 각 업체의 이윤이 누적되어 최종 소비자 가격을 높입니다. 반면 해외직구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또는 제조업체에서 소비자로 직접 연결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중간 유통업체들이 챙기던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국제배송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국제 특송 택배 회사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이 많

이 오갈수록 한 개에 들어가는 배송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죠. 관세청 통계를 보면, 특송**으로 보내지는 물건 중 전자상거래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약 71%였고, 2024년에는 약 9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물건이 더 많아지니 택배 회사들이 한 번에 처리하는 양도 많아지고, 개당 배송비 부담도 예전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제 더 싸게, 그리고 더 빠르게 해외직구 물건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단순화된 유통구조로 유통 비용이 크게 절감된 부분에 **직구 물량의 증가에 따른 개당 배송 비용 절감**이 더해져 유통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가져온 것이죠.

• 용어 정리 •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건이나 활동에만 따로 붙는 세금입니다. 일반 생활용품보다는 사치품이나 골프장 등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입장권, 유흥주점 등에서의 소비 같은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돼요.

**** 특송**
특송은 특급탁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송업체는 관세법에 따라 세 관장에 등록한 업체이며, 이 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특송물품'이라고 합니다.

***** 블랙프라이데이 (Black Friday)**
미국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 다음 날 열리는 전통적인 대규모 세일 행사로,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온라인 세일 시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결국은 해외직구

앞서 살펴본 관세와 유통구조에 앞서, 해외직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환율**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온라인몰을 통해 해외직구를 하면, 달러, 유로화, 위안화 등 외화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직구의 가격을 크게 좌우하죠. 원화의 가치가 높을 때는 적은 돈으로도 물건을 살 수 있어서 해외직구가 유리해집니다. 반면에 원화의 가치가 낮을 때는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돈을 더 많이 내야만 하죠. 예를 들어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10만 원으로 100달러짜리 운동화를 살 수 있지만,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했을 때는 같은 운동화를 사기 위해 15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 1~2년 동안은 원-달러 환율이 1,302원에서 1,488원 사이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해외직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통상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해외직구가 줄어드는 것이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이를 상쇄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등 해외직구 극성수기가 도래했을 때의 물량 급증에 대비한 특별 통관 대책[2]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물량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정부와 글로벌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 간 제품 안전 협약 체결 등으로 소비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면서 사용자의 구매에 대한 신뢰와 편의성이 높아졌죠. 여기에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도 국내 물가는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미국 등 해외 온라인몰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강해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국내보다 상품을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환율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지만, 물류 효율화나 소비자 보호 강화, 해외 온라인몰의 가격 경쟁력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한 것입니다.

2) 관세청, 「관세청, 연말 극성수기 대비 '해외직구 특별 통관 대책' 시행」, 보도자료, 2024.11.7.



다양성이 만든 직구의 매력

이렇게 해외직구는 '가격'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직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를 단순히 '싸다'라는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연구(2023.6)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가격 경쟁력 외에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요인으로 꼽은 것은 **'상품의 다양성'**입니다. 국내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 예를 들어, 해외 한정판 운동화, 특별한 취향을 타는 소품, 일본의 특정 캐릭터 상품, 유럽 소규모 브랜드의 핸드메이드(handmade) 제품 같은 것들은 해외직구로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전자제품을 남들보다 먼저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소비자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이겠죠. 또, 동일한 제품이라도 해외에서는 색상이나 크기가 더 다양한 경우도 있고요. 결국 해외직구의 매력은 가격에서 출발하지만, 그 이상으로 소비자들의 취향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서 심지어 제품이 다양하기까지 하다! 해외직구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위험과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소비자들이 겪는 문제점으로는 배송 지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이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때로는 통관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몇 주를 기다리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해야 할 때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배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반품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내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고장이 나거나,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으로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보고됩니다. 심지어 가짜 상품이나 모조품을 잘못 사게 되는 피해도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3]에서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을 상담하고 조정해 주고,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함을

3)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s://crossborder.kca.go.kr

인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대책[4]에 따르면,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등의 세부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에 대한 제품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제품을 사전에 막고,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해외직구의 시대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분명 소비자는 새롭고 다양한 선택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싼 가격과 화려하고 다양한 제품을 무턱대고 클릭하기보다는, 그 뒤에 숨은 위험과 제도적 장치까지 함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백화점에서 본 가격보다 직구 사이트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가 때로는 불량품이나 가짜일 수도 있고, 배송 지연으로 한 달 뒤에야 손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외직구는 단순히 싸기만 한 쇼핑이 아니라, 소비자의 똑똑한 판단이 요구되는 소비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점을 찾는 일, 그것이 앞으로 해외직구를 더 건강한 소비 문화로 만드는 열쇠일 것입니다.

김유영 KDI 전문연구원
ykim@kdi.re.kr

4) 국무조정실,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보도자료, 2024.5.16.

참고문헌

관세청, 「관세청, 연말 극성수기 대비 '해외직구 특별 통관 대책' 시행」, 보도자료, 2024.11.7.
국무조정실,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보도자료, 2024.5.16.
연합뉴스, 「중국발 해외직구 하루 10만 개 통관… 인천세관 특송센터」, 2024.11.28.
조선비즈, 「해외여행 줄었는데 '카드 해외 사용' 늘었다… "온라인 중국 직구 급증"」, 2025.8.26.
조선일보, 「"국내가 더 비싸, 글로벌 호구"… 해외직구는 한국판 '소비자 운동'」, 2024.5.21.
통계청, 「e-나라지표 -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이용 및 피해 실태조사」, 2023.6.
한국은행, 「2025년 2분기 거주자 카드 해외 사용 실적」, 보도자료, 2025.8.27.

01

다음의 해외직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모든 해외직구 상품에는 반드시 관세가 붙는다.
②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수입 제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③ 국제 특송 물량이 줄어들수록 건당 배송비가 감소한다.
④ 상품 다양성은 해외직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환율이 높아질수록 해외직구는 감소한다.

02

다음 중 해외직구 물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무엇인가요?

① 소액 구매 시 관세 면제 혜택
② 단순화된 유통 구조
③ 규모의 경제에 따른 배송비 절감
④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
⑤ 직구 사이트에서의 저렴한 판매

03

환율과 해외직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직구가 유리해진다.
② 환율이 하락하면 해외직구가 불리해진다.
③ 환율은 해외직구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해외직구 시 원화로 결제하는 금액은 환율에 좌우된다.
⑤ 최근의 해외직구 규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환율이다.

04

'규모의 경제'가 해외직구에 적용되는 사례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환율이 올라 소비자가 더 많은 물건을 사게 되는 현상
② 직구 사이트에서 상품 종류가 다양해지는 현상
③ 관세가 모든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
④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현상
⑤ 택배 회사가 직구 물량이 늘어날수록 건당 배송비를 줄일 수 있는 현상

05

다음 중 해외직구의 위험 요소로 옳지 <u>않은</u> 것은 무엇인가요?

① 배송 지연
② 반품의 어려움
③ 가격 변동
④ 가짜 상품 구매
⑤ 제품의 안전성 문제

06

다음 중 가장 현명한 해외직구를 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① 영인: 9살 동생을 위해 해외직구로 아동용 온열팩을 저렴한 가격에 샀어.
② 한나: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는 의약품이 있길래 친구들과 공동 구매했어.
③ 성록: 사고 싶었던 티셔츠가 국내 가격의 1/3밖에 안 하길래 일단 그냥 샀어.
④ 승휘: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희귀 피규어를 팔길래 환율을 고려해서 샀어.
⑤ 유영: 지난번 산 운동화가 생각보다 작았는데 반품 방법을 몰라서 그냥 뒀어.

정답 01② 02④ 03② 04⑤ 05③ 06④

키워드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양자원조, 다자원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특별한 여정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높은 경제력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전체가 참여해 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사회가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력을 이어온 역사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특별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란 무엇인가요?

교육과정

- 고등학교「통합사회2」세계화와 평화
- 고등학교「국제 관계의 이해」균형 발전과 상생

우리가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금씩 힘을 보태어 도와주듯, 국제사회도 기술, 지식 및 제도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뒤지고 있는 나라, 즉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와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도로, 철도, 병원, 학교 등의 사회기반 시설을 세워 주기도 하며, 교육과 기술훈련을 통해 자립을 돕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합니다.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개발재원(development finance)[1]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부를 비롯한 공적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합니다.



ODA에 대한 정의는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원조를 주는 나라)들의 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의해 1969년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자금이 ODA로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ODA는 **공적기관이 제공하는 자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비정부기구, 민간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자금은

1)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사용되는 공적개발원조와 그 밖의 자금. 수출 신용, 투자금융 같은 기타공적자금과 해외직접투자 민간자금 그리고 NGO의 민간 증여 등이 포함(국무조정실, 20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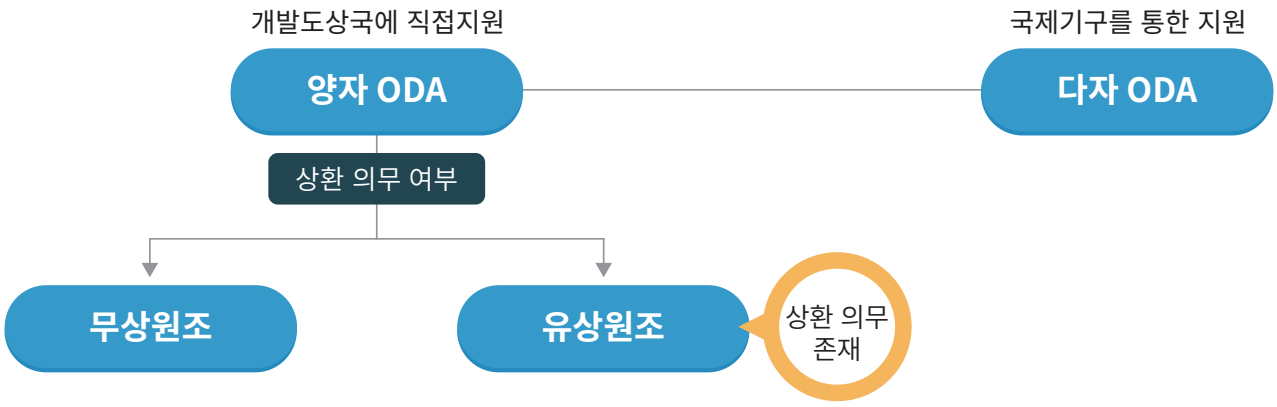
ODA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다음으로 지원의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업적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ODA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아닌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발표하는 협력대상국 및 다자개발기구 목록에 포함된 나라나 기구에 대한 지원**만 OD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의 경우, 이자율이 매우 낮아 증여의 성격이 강한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만 ODA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ODA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ODA는 공여국(원조를 주는 나라)이 협력대상국(원조를 받는 나라)에 직접 지원하느냐,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양자원조(bilateral aid)와 다자원조(multilateral aid)로 구분됩니다. 양자원조는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의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뉩니다. 무상원조는 협력대상국이 상환할 의무 없이 현금, 현물, 기술 등을 지원받는 것으로, 법적 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상원조는 상환 의무가 있는 지원으로, 개발도상국이 민간 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자원조는 공여국이 UN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에 자본금을 출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의 부유한 동네를 선진국, 형편이 어려운 동네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부유한 동네가 형편이 어려운 동네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지원하는 것을 '양자원조'**라고 합니다. 이때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한다면 '무상원조'**,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지만 **낮은 이자나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경우는 '유상원조'**에 해당합니다. 반면 부유한 동네가 직접 나서기보다 이 도시의 자선단체가 부유한 동네에서 돈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동네를 대신 돕는다면 이것이 바로 '다자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ODA의 종류



출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5.

2) 공적부문 재원만 포함하므로 민간 자체 재원은 ODA가 아니지만, 정부 재원을 받아 NGO가 집행하는 경우는 ODA로 집계됨.

ODA를 지원하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공여국이 협력대상국에 ODA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일까요? 기본적인 목적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여국의 국가 이념이나 목표, 협력대상국과의 역사·문화적 관계에 따라 ODA를 제공하는 동기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선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도덕적 의무이므로 **인도주의적 동기**로 ODA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간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동기**로 ODA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각 진영에는 세력 확장 및 외교적 지지 확보를 위한 원조 경쟁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이 전쟁으로 황폐화된 서유럽에 지원을 제공한 마셜 플랜(Marshall Plan)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상업적인 이익을 고려한 **경제적 동기**도 존재합니다. ODA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산업 기반이 성장하면 장기적으로 공여국의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국산 상품과 인력으로 협력대상국에 원조를 제공하여 자국 시장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세계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질병 확산, 테러와 난민 사태와 같은 문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전세계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공통 과제라는 인식하에 **상호의존적 동기**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셜 플랜

1948년 4월 3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경제협력법에 서명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서유럽의 재건을 위한 유럽 부흥 계획(ERP, European Recovery Program)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창자인 조지 마셜(George C. Marshall)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 '마셜 플랜'으로 불린 이 계획은, 유럽의 경제 회복과 공산주의 확산 방지, 그리고 미국 중심의 자유시장 체제 강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약 4년 동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6개국에 130억 달러가 넘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마셜 플랜은 서유럽의 빠른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했으며, 이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설립과 경제협력개발기구로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계획을 통해 서유럽 국가들은 전례 없는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을 심화시켜 냉전 체제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셜 플랜은 전후 혼란 속에서 서유럽이 안정과 번영을 되찾은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계획의 성공은 국제사회가 원조의 중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국제개발협력이 확대되고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계획의 직접 수혜국은 아니었습니다.

ODA와 한국의 경제 발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한동안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ODA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이었습니다. 1945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7억 달러의 원조를 지원받으며,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상원조가 식량과 의약품 등 긴급구호 성격의 지원에 집중되었습니다. 이후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경공업 중심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 추진되면서 개발차관 등 유상원조가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도로와 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이 확충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고도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표 1 우리나라의 수원 역사

	목적 및 욕구	형태 및 양식	분야 및 구성	원조 의존도	주 공여자
1945-1952	· 긴급구호	· 증여(100%) · 구호물품	· 교육 · 토지개혁	· 원조가 주요 외화 유입수단	· 미국
1953-1962	· 군사적 방어 · 안정 · 재건사업	· 증여(98.5%) · 물자 · 기술협력	· 농업 · 물자, 식량자원 · 군사원조 · 소비/중간재	· 높은 원조 의존도	· 미국 · UN
1963-1979	· 전환기 · 성장 및 투자	· 양허성차관(70%)	· 사회간접자본 · 수입대체 및 수출지향적 사업 · 프로젝트 원조 및 중간자본재	· 절대/상대적 원조 중요성 감소	· 미국 · 일본
1980-1992	· 과도한 채무 · 안정 및 성장균형	· 비양허성차관	· 섹터 차관	· IDA 협력대상국 명단 졸업	· 일본 · 독일 · 국제 금융기구
1993-2003	· 금융위기	· IMF구제금융	· 구조조정 프로그램	· ODA 협력대상국 명단 졸업	· IMF · IBRD

출처: 국무조정실, 2020.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이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기반 확충 등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ODA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87년에는 재무부가 300억 원을 출연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설립하고, 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했습니다. 이어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외무부 산하에 설치하여 무상원조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무상원조를 병행하는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ODA 체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라 총괄·조정기관,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구성된 3단계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 정책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합니다. 국무조정실의 국제개발협력본부는 정책 수립, 사업 연계·조정, 평가 및 홍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주관기관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로 나뉩니다.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를 담당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사업 발굴과 집행을 맡습니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부처 간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무상원조**를 총괄하며 한국국제협력단을 관리·감독하고,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사업 중복을 방지합니다. 이밖에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과 인도적 지원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4년 기준 46개 기관이 약 2천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상원조를,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협력사업을 맡고 있으며,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1995년 우리나라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ODA 수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2000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수원국 명단에서도 제외되어 원조를 받던 나라의 역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마침내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정식 가입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이 확정됐다.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11월 2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전원합의로 한국이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출처: 이데일리, 2009.11.26.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ODA 사업과 자문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등 개발협력 분야에서 책임 있는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은 ODA를 활용한 경제·사회 발전의 좋은 모델로 국제사회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줄이고,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을 향상시키며, 성평등의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인도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ODA도 이제 단순히 '도움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구촌 가족의 일원으로서 ODA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여정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임효상 KDI 전문연구원
hyosang@kdi.re.kr

참고문헌

관계 부처 합동,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5.2.
국무조정실, 『2020 대한민국 ODA 백서』, 2020.
국무조정실, 『2024 대한민국 ODA 백서』, 2025.4.
이데일리, 「韓,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첫 사례`」, 2009.11.26.
한국국제협력단, 「KOICA와 함께하는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강의자료, 2025.

01

다음 중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민간 자금
② 선진국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지원
③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정적·기술적 지원
④ 개발도상국 간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한 무역 협정
⑤ 민간단체(NGO)가 모금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기부금

02

다음 중 공여국이 ODA를 제공하는 주요 동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도주의적 동기
②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치·외교적 동기
③ 협력대상국의 산업 기반 성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려는 경제적 동기
④ 지구 환경과 기후, 질병 등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의존적 동기
⑤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타국의 무기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군비 경쟁 동기

03

다음 중 마셜 플랜(Marshall Pl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추진한 계획이다.
② 미국이 아시아 신생 독립국들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실시한 군사 원조 프로그램이다.
③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서유럽의 재건을 위해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계획이다.
④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한 태평양 지역 개발 계획이다.
⑤ 국제연합(UN)이 주도하여 전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국제구호사업이다.

04

다음 중 우리나라의 ODA 제도 및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ODA는 외교부 단독으로 관리·집행된다.
② 유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무상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한다.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④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KOICA가 직접 운용한다.
⑤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한다.

05

다음 중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차이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무상원조는 상환 의무가 있고, 유상원조는 상환 의무가 없다.
② 무상원조는 상환 의무가 없으며, 유상원조는 시장 이자율로 제공되는 차관 형태이다.
③ 무상원조는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유상원조는 양자 간에 직접 이루어진다.
④ 무상원조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유상원조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이다.
⑤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는 모두 양자원조에 해당한다.

06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줄이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는다.
②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을 중시한다.
③ 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인도주의 실현을 추구한다.
④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한다.
⑤ 공여국의 상업적 이익과 군사력 확대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정답 01 ③ 02 ⑤ 03 ③ 04 ③ 05 ⑤ 06 ⑤

키워드 유동성, 유동성 위기, 유동성 규제, 중앙은행

유동성을 규제하는 이유는?

>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중략)…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했던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와 …(중략)…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12.31.

교육과정

- 고등학교『경제』경제학과 경제 문제
- 고등학교『경제』거시 경제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정부는 은행의 유동성과 관련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 금융 규범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100%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농협·신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 기관에도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정책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유동성'이란 무엇이기에 금융 규제의 핵심 기준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까요? 또 은행은 분명 민간 기업인데,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규제를 해야 할까요?

유동성이란?

경제학에서 **유동성(liquidity)**은 한 형태의 자산이 다른 형태의 자산 또는 재화로 얼마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교환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을 화폐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어떤 자산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쉽고 빠르게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전환되는가'를 나타냅니다. 지폐나 주화와 같은 현금은 손실 없이 빠르고 쉽게 다른 자산으로 교환되거나 교환의 매개수단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적금, 주식, 자동차,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다른 자산으로 교환되기 위해 더 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현금보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유동성은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유동성이란, 당장 다가온 급여 지급이나 거래처 대금, 이자와 같은 **단기적인 지출을 문제없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기업이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산이 많지만, 단기적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한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한편, 뉴스에서 흔히 등장하는 "유동성이 많다"는 표현은 **거시경제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제 전체에 거래와 결제에 쓰기 쉬운 돈과 신용이 얼마나 넉넉한지를 가리키는 말로, 통화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부르는 다른 말인 통화(currency)[1]를 M1(협의통화)과 M2(광의통화)로 구분합니다. M1은 지



급결제수단으로서 기능을 중시한 지표로,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더한 것입니다. M2는 M1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등 M1보다 다소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비교적 손실 없이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즉, M1과 M2의 구분에 유동성의 개념이 사용된 것이며, M1보다 M2가 유동성이 작은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이라고 할 때는 통상 M2를 의미합니다. 한편, M2에 2년 이상 장기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지표도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통화지표라기보다 유동성지표로 분류됩니다.[2)]

은행에게 유동성이란?

은행권에서도 유동성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예금을 받고 예금보다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때문에 많은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려고 할 경우, 자산은 충분해도 당장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자산이 많은 기업이 도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행에게 유동성이란 예금보유자들이 현금 인출을 원할 때 지체 없이 현금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은행이 예금자의 인출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을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라고 합니다. 이때 중앙은행, 즉 우리의 경우 한국은행이 해당 은행에 현금을 직접 대출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의 유동성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단기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규제 지표**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Ⅲ(Basel Ⅲ)*** 체계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30일간의 극단적 유동성 위기 시나리오에서도, 은행은 보유한 고유동성자산(HQLA, High Quality Liquid Assets), 즉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으로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이 비율을 높이려면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젤Ⅲ에서 정한 방침은 규제의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 용어 정리 •

*** 바젤Ⅲ(Basel Ⅲ)**

바젤Ⅲ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과도한 레버리지(차입을 활용한 자산 확대)와 취약한 유동성 구조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에서 출발한 국제 은행 규제 기준입니다. 이전의 바젤Ⅱ는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과 급격한 자금 경색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규제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자본과 유동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바젤Ⅲ가 마련되었습니다. 바젤Ⅲ의 핵심은 총자산 대비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며, 위기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세계 공통의 안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1) 일반적으로 미시경제학의 맥락에서는 '화폐'를, 거시경제학의 맥락에서는 '통화'를 각각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화폐보다 통화가 더 공식용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와 화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합니다(정운찬·김홍범).

2) 유동성 지표는 Lf(금융 기관 유동성)와 L(광의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 지표는 통화지표에 더 많은 금융상품이 포함된 범위가 큰 지표입니다.

은행 규제와 중앙은행의 탄생

유동성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이제 다음 질문인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한 이유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과 중앙은행의 탄생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은행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금과 은을 들고 다니기 불편했던 상인들은 런던의 금세공업자에게 귀금속을 맡기고 대신 보관증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이 보관증서를 건네 주고, 이를 받은 사람이 세공업자에게 가져가 금과 은을 찾아갈 수 있다면 거래가 매우 편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공업자의 보관증서가 오늘날의 **지폐**(banknotes)처럼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 보관증서는 훗날 등장하는 **은행권**[3]의 시초가 됩니다.

사람들이 보관증서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하자 금세공업자의 역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금과 은을 보관해 주던 이들은, 점차 보관증서를 확인 후 지급을 대신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대출까지 제공하는 등 오늘날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람들이 맡긴 것을 모두 한꺼번에 찾으러 오지는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실제 보유한 금속보다 조금 더 많은 보관증서를 발행해 대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금창조**(deposit creation) 또는 **신용창조**(credit creation)의 초기적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이 보관증서를 한꺼번에 들고 오기 시작하면, 금세공업자는 실제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양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인출 요구가 동시에 몰리는 상황을 '**뱅크런**(bank run)'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금세공업자 즉, 초기 은행 역할을 하던 이들은 매우 곤란해집니다. 이것이 소위 앞에서 말한 유동성 위기입니다. 이것만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금세공업자들이 사실상 은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발행한 보관증서의 신뢰도가 저마다 달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금 1온스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지만, 개별 금세공업자의 평판과 재무 상태에 따라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는 서로 달랐습니다. 신뢰가 높은 곳의 보관증서는 액면가에 가깝게 거래된 반면, 신뢰가 낮은 곳의 보관증서는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17세기 후반부터는 국가가 감독하거나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표준화된 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661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스 방크가 유럽 최초의 공식 은행권을 내놓으며 공적 발권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후 1694년에는 영국이 **영란은행**을 세웠습니다.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도 상황은 달랐지만 혼란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미국은 통일된 중앙은행이 부재한 가운데 발권 권한이 여러 민간 은행에 분산된 체제를 운영했습니다. 각 은행이 발행한 지폐의 가치는 은행의 건전성이나 지역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졌고, 지급 능력이 취약한 은행이 발행한 '**와일드캣**(wildcat)

3) 금 본위제 아래에서는 금과 태환(兌換)되는 지폐를 의미하나,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여 현금으로 쓰는 지폐, 즉 국가의 신용을 배경으로 하는 불환 지폐를 의미합니다.

은행권'은 쉽게 휴지조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같은 액면가의 지폐라도 실제 교환가치가 서로 달라지며 화폐의 기능이 불안정해졌고, 신뢰의 붕괴는 거래비용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13년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System)**를 설립해 단일한 발권체계를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해 연쇄 파산을 막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부실은행의 대명사, 와일드캣 은행

1837년부터 1866년까지, 이른바 '자유 은행 시대'에는 연방 및 주 정부의 허술한 은행법으로 인해 사실상 누구나 은행을 설립하고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 정부, 시 정부, 카운티, 사설 은행, 철도 회사, 상점, 교회, 그리고 개인들이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이 당시 와일드캣(wildcat)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1830년대 미시간 지역의 은행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은행을 세워서 사람들이 **금이나 은으로 교환하러 오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일드캣 은행**(wildcat bank)은 이처럼 미국에서 주정부 은행업이 통제되지 않던 시기(1816~1863년)에 주법에 따라 설립된 부실 은행을 말합니다. 이러한 은행들은 담보 가치가 의심스러운 화폐를 발행했으며, 지폐 상환을 막기 위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야생 고양이 은행'이라는 용어는 일부 은행들이 외딴 곳에 위치하여 사람보다 야생 고양이가 접근하기 쉬웠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1863년 국립은행법(National Bank Act)이 제정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출처: Dwyer, 1996; Encyclopaedia Britannica;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를 참고하여 작성



Lancaster Bank $5 지폐



Bank of the Valley in Virginia $20 지폐

은행과 중앙은행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은행과 금융은 단순한 민간 산업을 넘어 경제 전체의 작동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과 결제 기능이 특정 은행의 신뢰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그 신뢰가 무너질 경우 충격이 개별 금융 기관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금융의 역사에서 규제가 미흡했던 시기에는 이러한 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그때마다 거래 위축과 신용 경색을 통해 경제 전체가 큰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은행 규제와 중앙은행의 존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축적된 제도적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은행의 유동성 규제가 중요한 이유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은행의 유동성 규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동성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은행은 예금과 결제, 대출을 통해 경제의 혈관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가 맡긴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같은 형태로 M1에 포함되어 이미 통화로 기능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한 은행이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게 되면, 예금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불안이 확산되고 뱅크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 은행 시대의 와일드캣 은행 사례나 이후 반복된 금융위기는 이러한 유동성 문제가 어떻게 신용 경색과 결제 기능의 마비로 번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중앙은행과 은행 규제 제도는 '은행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위기 상황에서도 화폐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발전해 왔습니다. 결국 은행의 유동성을 규제한다는 것은 은행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돈과 금융 시스템이 위기 속에서도 작동하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역시 겉보기에는 새로운 기술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에는 여전히 '유동성과 신뢰를 누가 보장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성훈 KDI 전문위원
econcha@kdi.re.kr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내년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4.12.31.

정운찬·김영식,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정운찬·김홍범, 『화폐와 금융 시장』, 율곡출판사.

Bordo, Michael D.,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n Historical Perspective: Another Crossroad in Monetary History," NBER Working Paper No. 29189, 2021.

Dwyer, Gerald P., Jr., "Wildcat Banking, Banking Panics, and Free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Economic Review, 1996.

Encyclopaedia Britannica, "Wildcat Bank," n.d.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Westward Expansion: Broken Bank Notes & Wildcat Issues," n.d.

Mankiw, N. Gregory, 『맨큐의 거시경제학』, 김경환·김종석 옮김, 센게이지러닝코리아.

Mishkin, Frederic S., 『화폐와 금융의 경제학』, 김인준·심혜선·김진욱 옮김, 시그마프레스.

01

다음 중 경제학적 의미의 유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산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② 자산이 손실 없이 얼마나 빠르게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③ 자산의 명목가치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뜻한다.
④ 자산이 금융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02

중앙은행의 M1과 M2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M2는 M1보다 항상 거래에 더 직접적으로 사용된다.
② M1은 통화지표라기보다 유동성지표로 분류된다.
③ M2에는 M1보다 유동성이 다소 낮지만 비교적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포함된다.
④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관리할 때는 통상 M1을 기준으로 삼는다.

03

다음 중 본문에서 설명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실 은행을 시장 원리에 따라 퇴출시키는 역할이다.
② 평상시에 은행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이다.
③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에 단기 자금을 공급해 시스템 불안을 완화하는 역할이다.
④ 정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기능이다.

04

다음은 은행의 유동성 규제 강화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부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강화하자, 일부 은행은 국채와 같은 고유동성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장기 대출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① 이는 은행의 유동성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② 유동성 규제는 은행의 자산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회계 기준만 바꾼다.
③ 은행이 위기 시에도 지급과 결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대신, 단기적으로 수익성은 낮아질 수 있다.
④ 이러한 변화는 은행의 유동성과 무관하며, 주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05

다음은 은행의 유동성 규제와 관련한 설명이다. 이 중 본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은행의 유동성 규제는 단기적인 예금 인출 집중 상황에서도 지급과 결제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안전장치이다.
②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이 고유동성자산만으로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③ 은행의 유동성 문제는 자산 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개별 은행 내부의 문제에 그치며,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
④ 금융의 역사에서 규제가 미흡했던 시기에는 은행의 신뢰 붕괴가 반복되었고, 이는 중앙은행과 은행 규제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정답 01② 02③ 03③ 04① 05③

키워드 중앙은행, 통화, CBDC, 스테이블코인, 디지털화폐

법정통화의 변신, CBDC와 스테이블코인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중략) …
>
> 출처: 한국은행, 2024.11.8.

> 정부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2025년 1월 15일)'를 통해 … (중략) …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한 바 있으며 … (중략) …
>
> 출처: 금융위원회, 2025.4.17.

교육과정

· 고등학교 『경제』 거시 경제

한국은행은 2024~2025년에 걸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실증사업을 실시했으며, 정부는 2025년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방안을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도입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반면, CBDC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1] 이처럼 각국의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상자산, 코인, 토큰, CBDC와 같은 **디지털 금융 용어들이 언론과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진다는 차원을 넘어, 돈이 만들어지고 이동하며 결제되는 방식, 즉 **금융과 결제 시스템의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보내는 이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화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화폐는 중앙은행만이 발행하나?

디지털화폐를 논하기 전에 먼저 고전적 의미에서 화폐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화폐가 ①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② 계산단위(unit of account), ③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화폐는 '거래를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수단'**입니다. 문명 초기에는 조개, 쌀, 소금, 비단과 같은 **상품화폐**가 사용되었고, 문명이 더욱 발달하면서 구리, 금, 은과 같은 금속으로 된 상품화폐가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화를 중심으로 한 통화체제가 확립된 뒤, 현대 사회에서는 금본위제와 같은 태환제도*를 벗어나 **법정 지급력을 가진 중앙은행 발행 화폐**(대체로 불태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Bordo, 2021).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지폐**와 **동전**이 바로 그것입니다.[2]

1) 미국은 GENIUS Act(Guaranteed and Enforceable Nationally Issued U.S. Stablecoins Act)를 제정하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2025년 7월 미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2) 화폐와 관련된 설명은 『경제로 세상 읽기』 2023년 11호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세계〉를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 용어 정리 •

*** 태환(兌換, convertibility)**은 지폐나 통화가 정화(specie) 등 특정 자산으로 교환되도록 발행기관이 법적으로 보증하는 상태를 말하며, **불태환(inconvertible)**은 이러한 교환 의무가 폐지되어 지폐를 더 이상 정화나 특정 자산으로 바꿔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화(正貨, specie)**란 금본위제 등에서 최종 결제 수단이 되는 본위 화폐로, 일정한 무게와 순도가 보증된 금·은 등의 금속화폐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동전만 화폐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아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시중은행의 예금도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식당에서 체크카드로 밥값을 결제하거나,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매하면서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폐나 동전이 오가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내 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이 줄어들고, 상대방의 은행 계좌에 예금이 늘어납니다. 즉, 실제 거래는 현금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기록된 예금의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금된 돈도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격을 표시하는 기준이 되고 일정 기간 가치를 저장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예금은 앞에서 언급했던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하며, 이를 흔히 **예금화폐** 또는 **예금통화**라고 부릅니다.[3]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관계

시중은행(commercial banks)은 **예금창조 또는 신용창조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 100만 원을 들고가서 A은행에 예금하면, A은행은 100만 원을 다시 을에게 대출해 줍니다. 이때 100만 원을 모두 대출하지 않습니다. 갑이 갑자기 돈을 찾으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은행이 10%인 10만 원을 남겨두고 90만 원을 을에게 대출해 주었다고 합시다. 을은 대출받은 90만 원을 주거래 은행인 B은행에 예금해 둡니다. 그러면 B은행은 다시 10%를 남기고 81만 원을 병에게 대출하고 병은 다시 C은행에 이를 입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경제에 실물 돈은 100만 원이지만, 예금액은 갑의 100만 원, 을의 90만 원, 병의 81만 원을 모두 더한 271만 원입니다.[4] 앞의 예에서 예금도 거래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은행이 신용창조라는 과정을 통해 예금화폐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유인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은행이 예금 인출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탐욕과 집단적 인출이 결합될 때 금융 불안은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준비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급준비제도란 은행이 예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보유(시재금)하거나 중앙은행에 예치(지준예치금)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은행이 과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대출하지 않고 남겨 둔 10%의 돈이 지급준비금입니다. 이로써 은행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금 인출 요구에 최소한의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예금 인출이 갑자기 몰리는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은행이라 하더라도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 지급불능 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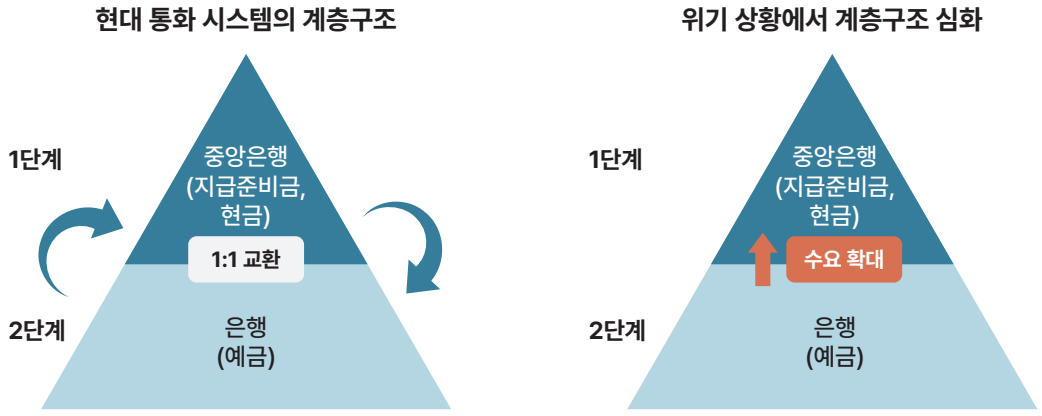
3) 일반적으로 미시경제학의 맥락에서는 '화폐'를, 거시경제학의 맥락에서는 '통화'를 각각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화폐보다 통화가 더 공식용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와 화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합니다(정운찬·김홍범).

4) 이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전체 신용창조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의지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금융 파트너, 즉 '**은행의 은행**'으로 불립니다. 중앙은행이 '은행의 은행'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개인이나 기업과 직접 예금·대출 거래를 하지 않고** 오직 시중은행을 상대로만 통화를 공급하고 금융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중앙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5)]

이처럼 현대의 통화·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 통화와 시중은행 예금통화가 역할을 분담하는 이중계층(two-tier)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그림 1 참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본원통화(현금과 지급준비금)**는 금융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1단계 통화로서, 최종 결제 수단이자 신뢰의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시중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통해 만들어내는 예금통화가 2단계 통화로 존재하며, 이러한 통화 시스템은 예금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중앙은행 통화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2025.11).

그림 1 현대 통화 시스템의 구조



출처: 한국은행, 20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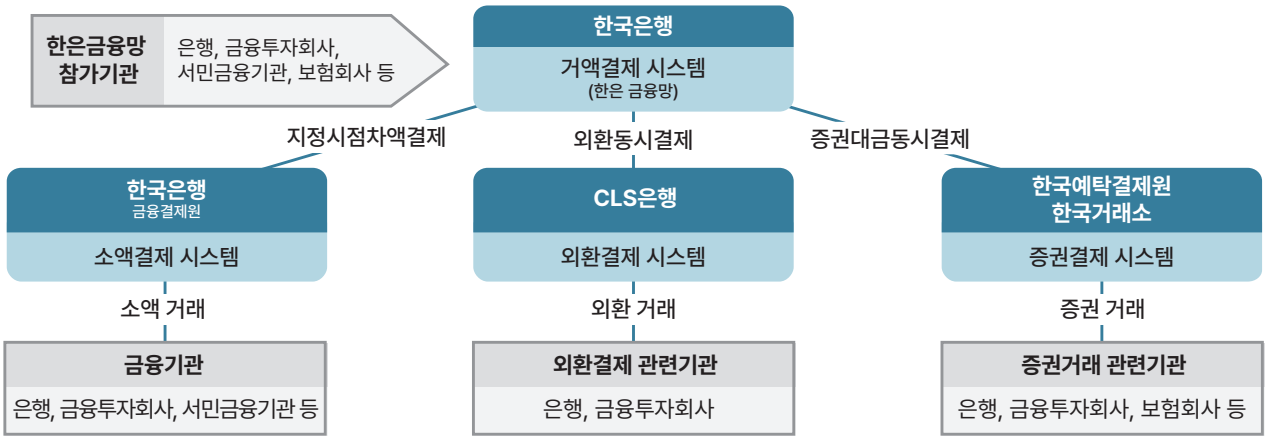
사실 대부분의 통화는 민간 은행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광의의 통화(M2) 규모가 GDP 대비 비중으로 볼 때 1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고, 광의의 통화의 약 90%는 민간 은행 예금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다른 경제권에서는 그 비중이 더 높아서 유로 지역에서는 91%, 일본에서는 93%, 영국에서는 97%에 달합니다(The Economist, 2021.5.6). 우리나라의 경우 2024~2025년 사이 광의의 통화 중 본원통화(현금 + 지급준비금)의 비율은 대략 8~10% 사이였습니다.[6)] 즉, 민간 통화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vs. CBDC

오늘날 금융 거래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신뢰에 기반한** 탄탄한 이중계층 구조를 토대로 이미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림 2 참고). 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자금 결제는 오래전부터 전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어 왔고, 은행과 기업·가계 간의 거래 역시 계좌이체, 카드 결제, 모바일 결제 등 디지털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다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얼핏 중복된 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5) 중앙은행의 탄생과 통화지표에 대한 설명은 『경제로 세상 읽기』 2025년 8호 〈유동성을 규제하는 이유는〉을 참고해 보세요.
6)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이용해 저자가 계산

그림 2 디지털과 전자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출처: 한국은행, 2025.4.

• 용어 정리 •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현금과 같은 국가의 공식 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만든 것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그 가치와 신뢰를 책임지는 새로운 전자적 지급수단이다. 쉽게 말해, **현재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는 지폐와 동전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CBDC라는 용어는 2015년에 영란은행이 최초로 사용했다(한국은행, 2022).

*** 거액결제 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시스템이다.

*** 소액결제 시스템**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 시스템으로서 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처리된다(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중앙은행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현금 사용이 감소하는 환경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지급수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안전한 결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입니다(한국은행, 2025.11). 이러한 문제의식은 실험 단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하마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샌드달러(Sand Dollar)'를 발행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시험했습니다(The Economist, 2021.5.6).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이유만으로 최근 중앙은행들의 긴박한 움직임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계기는, 어쩌면 스테이블코인이 던진 도전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통화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토큰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안정성을 무기로 결제와 송금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매력은 분명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는 빠르고,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도 비용이 낮습니다. 기존 국제결제 시스템이 느리고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테이블코인은 현실적인 불편을 해결해 주는 대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의 결제 수단을 넘어, **상거래 결제와 송금 영역으로까지 사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중앙은행의 우려**가 시작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역할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준비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작은 의심만으로도 대규모 환매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불안으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은 머니마켓펀드(MMF)처럼 안전해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코인런**'에 취약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The Economist, 2025.9.29).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해 확

산될 경우, 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이 약화되고 **금융 중개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를 약화**시키고,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는 데 새로운 공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The Economist, 2021.5.6). **중앙은행의 통제와 최종대부자 기능 밖에 있는 민간 디지털 토큰**이 통화 시스템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로 이동할 가능성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도전입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에 우호적인 이유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달러의 사용 범위를 넓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결제와 온라인 거래가 디지털 방식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공간의 달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발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준비자산은 주로 단기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확대될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CBDC는 스테이블코인이 제기한 위험에 대해 중앙은행이 제도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CBDC가 만능 해법인 것도 아닙니다**. CBDC가 발행되면 지금의 지폐와 동전이 디지털로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은 개인에게 예금을 예치하는 경쟁**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할 경우, 사생활 보호 문제, 은행의 중개 기능 약화, 위기 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 등 새로운 위험이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중앙은행은 CBDC 도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설계 방식과 도입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The Economist, 2023.6.8).

이 지점에서 다시 매우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혁신은 본래 민간에서 발생하는데, 왜 중앙은행이 결제 시스템의 중심에 다시 서려 하는가**'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의 주장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Jean Tirole, The Economist, 2025.9.29).

"결제 시스템은 투기적 토큰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혁신은 대체로 민간 기업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 인프라는 개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기업가들이 그 위에서 응용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공공의 신뢰와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결국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선택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도 화폐의 신뢰와 안정성을 어떤 제도적 틀 위에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차성훈 KDI 전문위원
econcha@kdi.re.kr

참고문헌

정운찬·김홍범, 『화폐와 금융 시장』, 율곡출판사.

금융위원회,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 2025.1.15.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2022.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도자료, 2024.11.8.

한국은행,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2025.4.

한국은행,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2025.11.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https://www.bok.or.kr/portal/ecEdu/ecWordDicary/search.do?menuNo=200688

Bordo, Michael D.,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n Historical Perspective: Another Crossroad in Monetary History," NBER Working Paper No. 29189, 2021.

The Economist, "When Central Banks Issue Digital Money," May 6, 2021.

The Economist, "A Flawed Argument for Central-Bank Digital Currencies," June 8, 2023.

The Economist, "Stablecoins Might Cut America's Debt Payments. But at What Cost?" September 29, 2025.

Tirole, Jean, "Payments Should Be Built on Public Infrastructure," The Economist, September 29, 2025.

01

다음 중 글의 논지에 비추어 볼 때, 화폐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① 화폐는 국가가 법으로 지정할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② 화폐의 기능은 기술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된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③ 화폐는 거래를 가능하게 하지만, 현대 경제에서는 자산 보유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④ 화폐는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 외에도 가격을 표시하고 가치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02

다음 중 본문에서 설명한 현대 통화·결제 시스템의 특징에 가장 가까운 설명은 무엇인가?

① 현대 통화 시스템은 법정통화를 기초로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이중계층 구조로 운영된다.

② 현대 통화 시스템은 현금 중심의 단일 구조로 운영되며, 디지털 결제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③ 현대 통화 시스템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민간 디지털 토큰이 중앙은행 통화를 대체하며 결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④ 현대 통화 시스템에서는 소액결제와 거액결제가 모두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리되며, 중앙은행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03

다음 중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①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기존 은행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② CBDC는 중앙은행 통화 체계의 연장선에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영역에서 발전한 디지털 토큰이다.

③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만, CBDC는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④ CBDC는 투자자산이고,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전용 수단이다.

04

다음 중 본문에서 인용한 경제학자 장 티롤(Jean Tirole)의 주장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중앙은행은 모든 결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

② 공공 인프라는 혁신을 저해하므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③ 결제 혁신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④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투기적 토큰이 아닌 공공 인프라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05

다음 중 화폐 또는 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못한</u> 것은 무엇인가?

① 인류는 조개나 곡물과 같은 상품화폐에서 출발해 금속화폐를 거친 뒤, 태환제도를 벗어난 법정화폐 체제로 발전해 왔다.

② 현대 경제에서 은행 예금은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며, 은행의 대출 과정에서 신용창조를 통해 확대될 수 있다.

③ 통화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지급수단만을 의미하며, 민간 부문에서 생성된 지급수단은 통화로 볼 수 없다.

④ 미시경제학의 맥락에서는 '화폐'를, 거시경제학의 맥락에서는 '통화'를 각각 쓰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

정답 01④ 02① 03② 04④ 05③

키워드 디지털 결제 수단, 전자금융 거래법, 선불카드, 락인효과

충전한 '내 돈'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

- 선불전자지급수단 -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한 번 열어봅시다. 혹시 그 지갑 안에는 카드 몇 장과 영수증만이 덩그러니 들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애초에 지갑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쪽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당연하게 버스와 지하철을 탈 수 있고,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살 수도 있고, 쇼핑을 즐길 수도 있죠. 지갑이 없어도, 즉 현금이 없어도 하루 종일 돈을 쓰는 데에 물리적인 불편함이 없이 일상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 고등학교「금융과 경제생활」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

길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지갑 대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 설치된 각종 앱에는 '페이', '머니', '포인트' 등의 이름으로 카드가 연동되고 돈이 충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티머니 교통카드, 간편결제, 게임 캐시, 그리고 기프티콘과 같은 것들을 떠올려보세요. 이미 10년 이상 '현금 없는 사회'로 진전되어 온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실제 현금이 오가는 모습을 거의 보기 어려워진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과연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겐 이미 친숙한 '미리 돈을 넣어두고 쓰는 방식'

최근 다양하게 등장한 '페이', '머니', '포인트' 등 돈을 **충전**해서 쓰는 결제 방식은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단지 그 방식을 훨씬 편하고 대중적으로 만든 도구일 뿐, 이전에도 우리 사회는 이미 돈을 미리 넣어두고 쓰는 방식, 즉 '선불 방식'의 지불수단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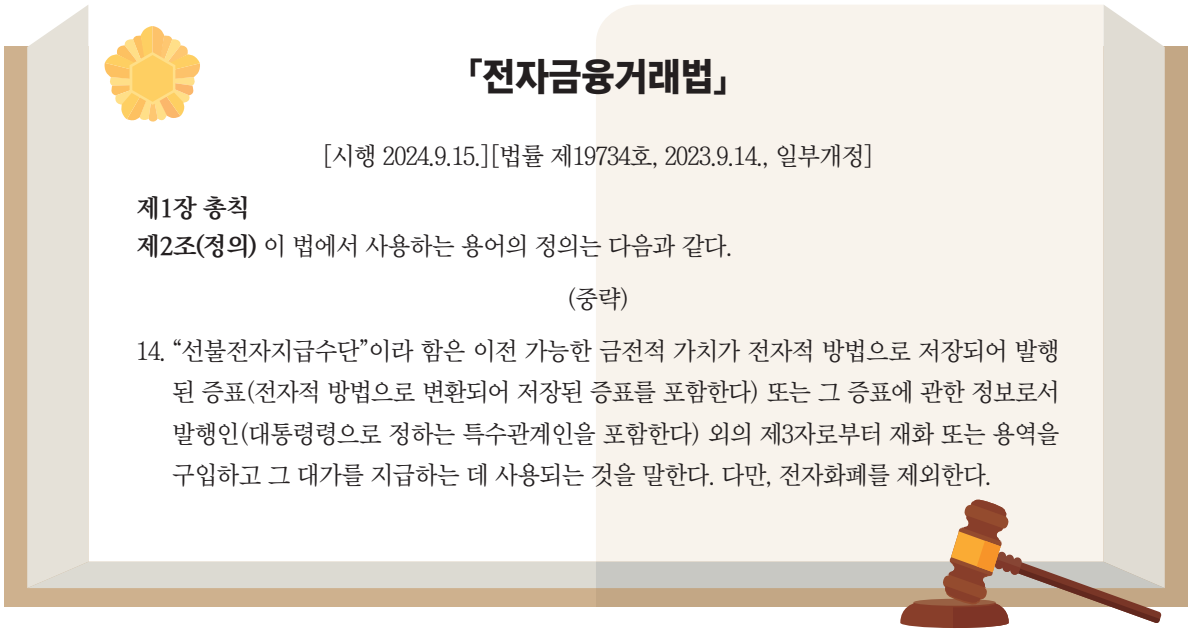
예를 들어, 지금의 3040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해 보았을 싸이월드를 아시나요? 개성 있는 나만의 '미니홈피'를 꾸미기 위해서는 싸이월드의 사이버머니(cyber money)인 도토리가 필요했는데, 이 도토리는 휴대폰 소액결제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구입·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보급되지 않았던 1990년대, 우리는 1,000원, 3,000원, 5,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해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등장한 '티머니(T-money)' 같은 교통카드도 플라스틱 카드를 구입한 후 2만 원, 3만 원 등 교통비를 카드에 미리 충전해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중전화카드나 교통카드는 모두 선불카드(prepaid card)입니다. 미리 돈을 내고 카드의 형태로 돈을 바꾸어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미리 낸 금액이 카드 안에 기록되면 그 금액만큼 카드를 이용해 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카드나 교통카드와 같이 특정 목적으로만 쓰이는 카드가 있는 한편, 주로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된 기프트카드처럼 하나의 이용처에서 다양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에 쓸 수 있는 선불

카드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과 같이 다양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 없던 시절에도 이미 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디지털을 만난 선불카드가 법·제도권에서 새롭게 얻은 이름

이처럼 과거에는 현금이 플라스틱 카드 안에 기록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현금을 전자 계정에 기록, 즉 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내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금융·간편결제 서비스 앱을 통해 모두 이루어지죠.[1] 그리고 이처럼 충전된 전자 계정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 이 방식은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지급수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용어가 얼핏 보면 어려운 금융 용어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함께 찬찬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4.9.15.][법률 제19734호, 2023.9.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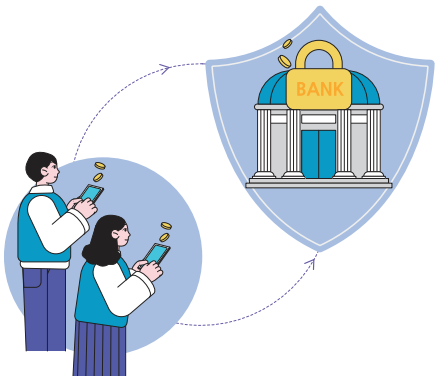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돈의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발행한 회사가 아닌 다른 곳(제3자)에서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지급수단이라고 정의합니다. 위 내용에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는 충전해 둔 금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는 플라스틱 카드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속의 QR코드, 바코드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가치가 **발행 회사가 아닌 제3의 사업자** 즉, 편의점, 카페, 온라인 쇼핑몰, 교통기관 등 다른 사업자에게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액을 충전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최첨단 결제 수단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카드처럼 충전도 스타벅스에서 하고, 사용도 스타벅스에서만 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충전한 돈은 사실상 '나중에 커피를 받을 권리'를 미리 사 둔 것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돈이 여러 곳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결제되는 것이 아닌, 특정 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1)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토스와 같은 금융·간편결제 서비스 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은 플랫폼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플랫폼 자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핵심이 단순히 미리 돈을 내고 쓰는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행한 곳을 넘어 여러 사업자 사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 머니나 네이버페이 포인트처럼 다양한 가맹점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은 현금처럼 여러 거래를 매개하며 사회 전체의 지급결제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법으로 이들을 별도로 구분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다 엄격한 보호와 책임 구조가 필요한 지급수단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정비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선불형 지급수단을 명확히 규율할 법적 틀이 없어, 발행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의 충전금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법으로 정의하면서 발행 요건, 자금 관리 방식, 이용자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단순한 선불 방식을 넘어 현금과 유사하게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서의 안정성과 신뢰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서 규율하게 된 것이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우리가 얻는 것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우리 생활에 빠르게 자리 잡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올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편리함**입니다. 이제는 지갑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고, 결제 후 다시 지갑에 넣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 없어진 시대가 왔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이 모든 과정이 크게 간소화된 것입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사거나, 교통카드를 찾기 위해 가방 속을 뒤적거릴 때 이러한 편리함을 더욱 실감합니다. 다음으로, **지출 관리의 용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는 충전, 결제, 잔액, 내역 모두가 하나의 서비스 안에 전자적으로 기록됩니다. 즉, 언제, 무엇을 위해 얼마를 썼는지 한눈에 확인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금액 지불 내역이 자동으로 정리되고, 잔액 또한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비 흐름을 파악하기에 유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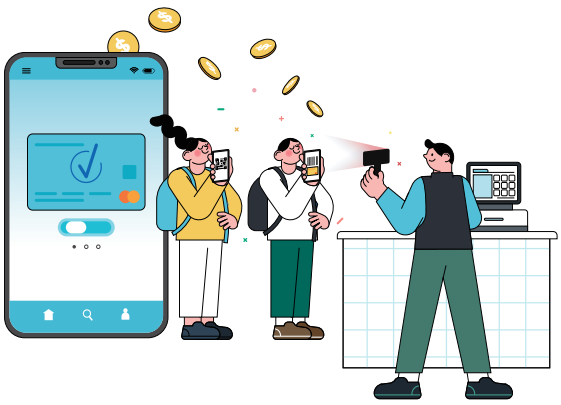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장점이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배경으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 업체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지급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행 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이용자가 충전해 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충전해 둔 돈은 각 기업의 운영 자금과 섞이지 않고 별도로 분리되어 관리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만들고 키우려 할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소비자들이 충전해 둔 돈은 기업 경영에 사용할 수 없는데, 기업들은 왜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만들고 유지하려고 할까요?

기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속 '충전금'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이 충전금은 단순히 미리 받은 돈이 아닌, **앞으로의 소비로 연결될 미래의 매출**이 됩니다. 이용자가 금액을 충전하는 순간, 그 돈은 당장 사용되지 않더라도 플랫폼 안에 머무릅니다. 잔액이 남아있어도 이는 잠재적 소비로 판단할 수 있어, 기업은 고객의 소비 흐름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매번 새로운 구매를 설득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형성하는데, 이는 플랫폼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업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결제할 때마다 가맹점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처리·기술 인프라에 대한 대가 등이 반복적으로 축적됩니다. 이러한 수익은 결제 건수가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며, 이는 단발성 거래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여기에 더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를 플랫폼에 묶어두는 힘을 가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락인 효과(Lock-in Effect)'**라고 부릅니다. 한 번 충전한 잔액이 남아있을 때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에 더 자주 접속하게 되고, 다른 결제 수단으로 옮길 유인은 줄어듭니다. 그 결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의 이용 기간이 길어지고, 연관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여지도 커집니다. 이러한 락인 효과가 네트워크 효과[2]와 결합되면, 플랫폼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시장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락인 효과(Lock-in Effect)

락인 효과는 한번 선택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가둔다는 의미에서 락인(Lock-in), 우리말로는 '잠금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용자가 어떠한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사용법에 익숙해지고, 그 안에 잔액을 비롯해 여러 이용 기록 등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해야 하고, 지금껏 쌓아둔 혜택이나 기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과 손해를 경제학에서는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이라고 합니다. 이 전환 비용을 높임으로써 이용자가 플랫폼 생태계에 오래 머물도록 강제하는 경쟁 전략이 락인 효과입니다.

2)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된 설명은 『경제로 세상 읽기』 2021년 1호 〈플랫폼 비즈니스 전성시대〉를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충전한 '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건수와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3] 그리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여러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앞으로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하나의 지급수단으로 점차 인식될 것입니다.

법이라는 제도적 틀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충전된 나의 돈은 개인에게는 지출을 관리하는 도구가 되고, 기업에게는 결제 흐름과 고객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며,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하나의 결제 방식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결제 수단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김유영 KDI 전문연구원
ykim@kdi.re.kr

3) 2025년 상반기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의 이용규모는 일평균 3,438만 건, 1조 2,909억 원으로 2024년 상반기에 비교해 각각 4.1%, 1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한국은행, 2025).

참고문헌

한국은행, 「2025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2025.

OECD, "Online Payment Systems for Ecommerce," OECD Digital Economy Papers, OECD Publishing, 2006.

Shapiro, C. and Varian, H. R., 『Information Rules: A Strategic Guide to the Network Econom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9.

01

다음 중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의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핵심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함
② 반드시 신용카드와 연계되어야 함
③ 현금처럼 언제든 인출이 가능해야 함
④ 발행한 회사에서만 사용될 수 있어야 함
⑤ 전자적으로 저장된 금전적 가치가 제3자에게서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함

02

스타벅스 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멤버십 포인트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
②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
③ 현금 영수증 발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④ 발행자 외의 다른 이용처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
⑤ 충전 가능한 금액에 법적·제도적 상한선이 있기 때문

03

다음 중 선불 방식 지불수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공중전화카드 ② 교통카드 ③ 기프트카드
④ 신용카드 ⑤ 상품권

04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소비자의 지출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이자가 붙기 때문에
② 할인율이 항상 더 높기 때문에
③ 할부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④ 현금보다 가치가 높기 때문에
⑤ 미리 충전해 둔 금액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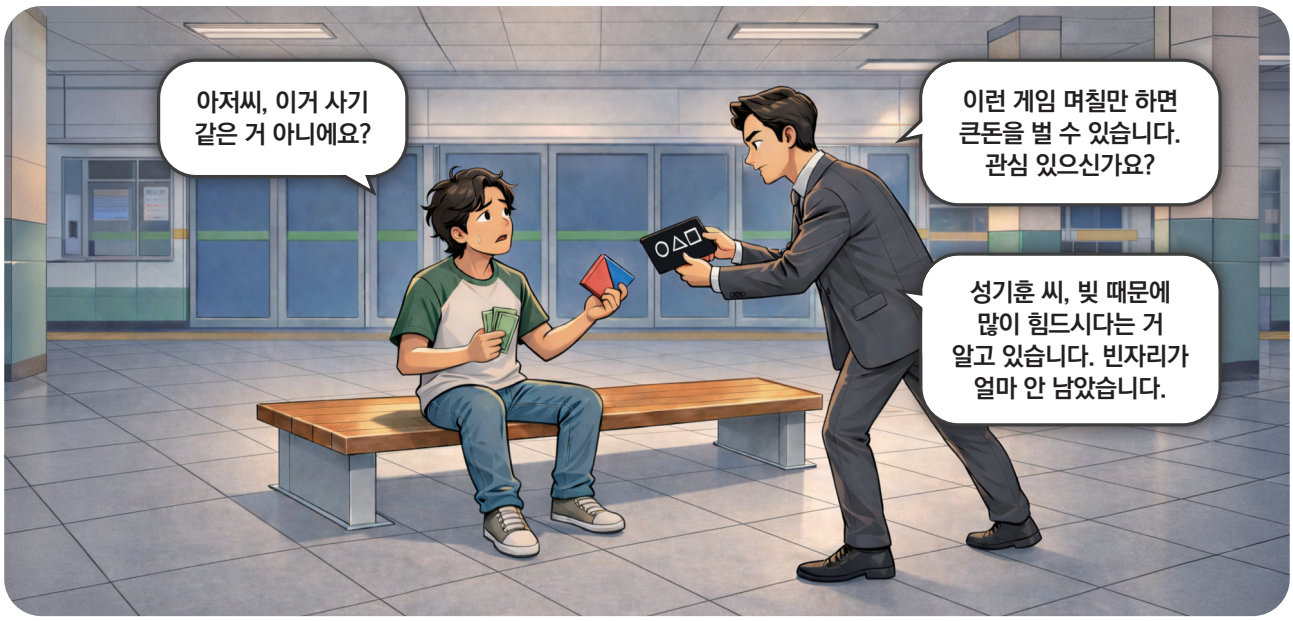
05

락인(lock-in) 효과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현금 사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
② 가격 경쟁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현상
③ 정부가 특정 기업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현상
④ 기술 발전에 따라 결제 수단이 빠르게 바뀌는 현상
⑤ 전환 비용 때문에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 머무르게 되는 현상

정답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⑤

개인이 빚을 안전하게 갚을 수 있도록



출처: 오픈AI ChatGPT (AI 생성 이미지)

교육과정
· 고등학교「금융과 경제생활」 신용과 위험 관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456번, 성기훈 씨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퇴직금을 털어 연 치킨과 분식 장사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사채업자의 끝없는 위협과 독촉 속에서 어머니의 수술비조차 구할 수 없었던 그에게 도착한 것은 '합리적인 회생의 기회'가 아닌, 목숨을 담보로 한 '오징어 게임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기훈 씨에게 게임 초대장이 아니라, 빚을 조정하고 갚아나갈 기회가 먼저 도착했다면 어땠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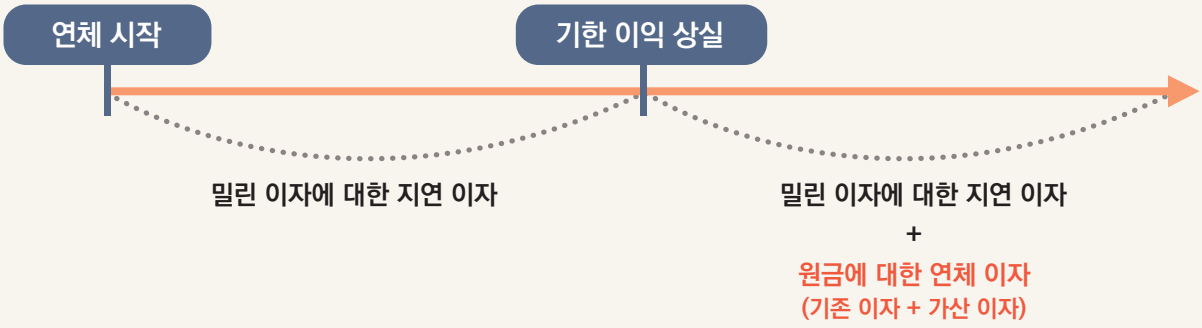
빚을 갚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

신용 사회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타인의 자산을 사용하는 대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성기훈 씨처럼 예기치 않은 해고나 사업 실패,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겹치면, 성실한 채무자라도 계획했던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죠. 문제는 이러한 연체가 반복되거나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채무자가 정상적인 상환 상태로 복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기한 이익이 상실**돼 빚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한 이익이란, 빌린 돈을 당장 한꺼번에 갚지 않고 약속된 날짜인 만기가 올 때까지 나누어 갚거나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성기훈 씨가 치킨집을 차리려고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3년 뒤 원금을 상환하고, 그동안 매달 이자 50만 원을 내기로 한 조건으로 말이죠. 여기서 3년 뒤에 원금을 갚을 수 있는 혜택이 바로 기한 이익입니다. 그런데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은행은 밀린 이자뿐만 아니라 남은 원금 전체를 즉시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돈이 부

족해진 성기훈 씨가 이자 50만 원을 연체하는 경우 기한 이익이 유지될 때는 연체된 50만 원에 대해서만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성기훈 씨가 이자를 계속해서 내지 못해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아직 갚을 날짜가 남은 원금 1억 원 전체에 대해서 연체 이자(기존 이자+가산 이자)가 부과되죠.

그림 1 기한 이익 상실 전후 이자 부담



* 기한 이익 상실 시점은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르며, 통상 신용대출은 30일, 주택담보대출은 60일 연체 시 발생합니다.

연체가 지속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제약을 받게 되죠. 국내외 금융 회사과 신용 평가사가 활용하는 연체 전이율(roll rate) 분석에 따르면,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는 시점부터는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상환 상태로 복귀할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 세계 금융 표준을 정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90일 이상 연체를 사실상의 '부도(default) 상태'로 판단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90일을 넘겨 연체한 채무자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합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신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죠. 이 경우 단순히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동차나 휴대폰 할부 구매, 정수기 등의 렌탈 서비스 이용 등 신용을 바탕으로 한 거래 전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보험사 직원이나 회삿돈을 관리하는 직무처럼 신용 상태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에 취업하려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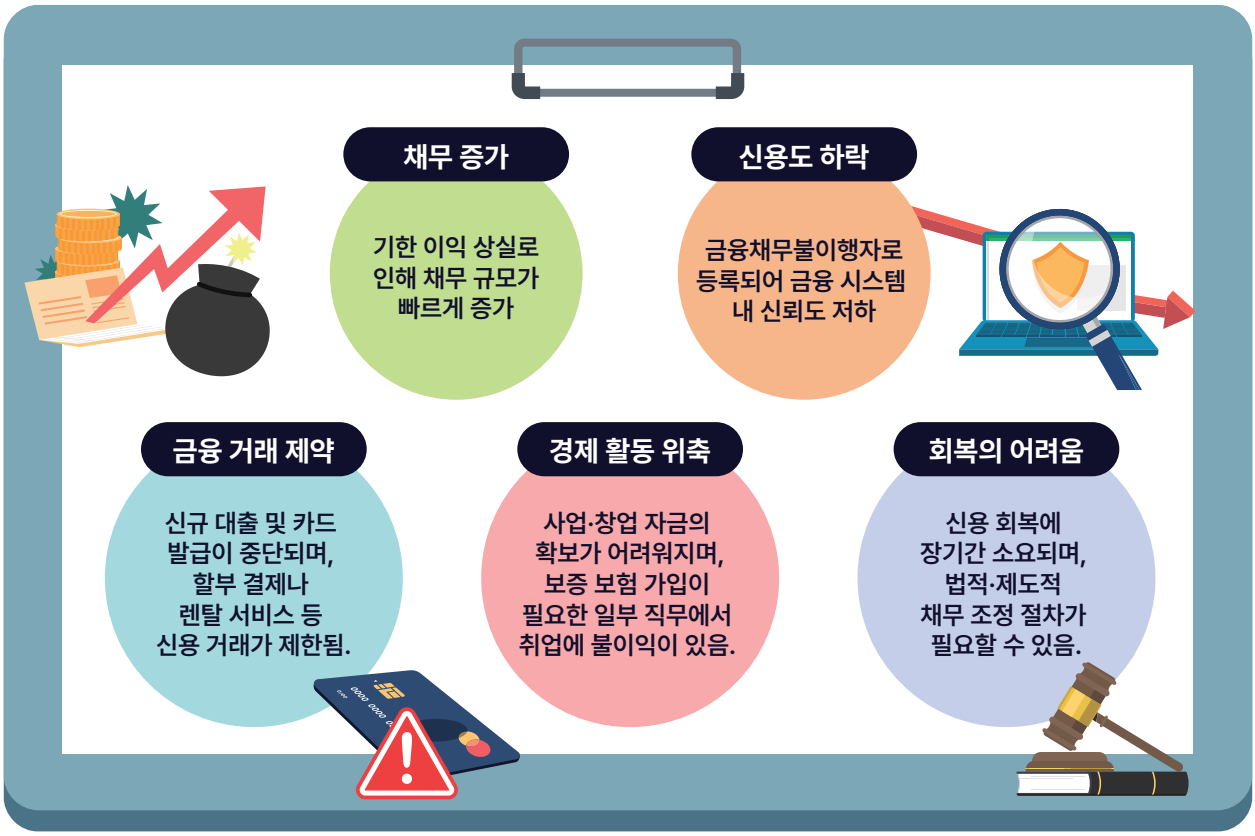
• 용어 정리 •

* 부실 채권(NPL, Non-Performing Loan)

'이행되지 않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금융 회사의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금융 회사는 연체가 길어져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채권을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전문 추심업체에 매각하기도 합니다. 추심 업체는 부실 채권을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이를 회수해 차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 하죠. 따라서 채무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강도 높은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속 성기훈 씨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걸려 오는 독촉 전화와 문자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연체가 장기화되면, 채무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림 2 장기 연체 시 불이익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이처럼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사회에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성기훈 씨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 성기훈 씨가 대리기사 일을 하며 일정한 소득을 벌고 있었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이 성기훈 씨의 상황을 살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다고 보는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3~5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죠.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였더라도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표 1 법원의 채무 조정 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지급 불능 상태의 개인채무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지급 불능 상태의 채무자
내용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5년간 변제하면 그 후의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 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

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빚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기훈 씨와 같은 개별적인 연체 사례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연체가 누적될 경우 사회 전반의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실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2002~2003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부실 사태, 이른바 '카드대란'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드 이용자가 대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가 무분별하게 발급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 연체자가 급증하였고, 일부 신용카드 회사의 연체율은 두 자릿수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연체가 늘어나자 금융 회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개인과 기업의 대출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대출 한도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정부는 개인의 채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지 않고,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자를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안전망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상환 환경을 만들어주는 개인채무자 보호법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제도들을 성기훈 씨가 제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이미 연체가 장기화되고 신용이 크게 훼손된 뒤에야 활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들 제도는 빚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야 이용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체 초기 단계에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만[1], 채무자가 제3의 외부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므로 절차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사이 연체 기간은 길어지고, 채무자의 부담은 커지며, 한 번 손상된 신용을 회복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죠. 이 때문에 피해가 커지기 전에 금융 회사와 미리 소통하며 상환 계획을 조정하는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사전 예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상환 능력에 맞추어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벼랑 끝에 몰린 성기훈 씨에게 목숨을 담보로 한 '오징어 게임 초대장' 대신,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라는 제도적 기회가 먼저 도착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성기훈 씨가 채무를 조정받으려면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제3의 기관을 찾아가 신청해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그는 연체 초기 단계에서 돈을 빌린 금융 회사에 직접 찾아가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단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하의 초기 연체자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 사이의 단기 연체자는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단계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복잡한 절차를 건너뛰고 채권자와 마주 앉아 "지금 너무 힘드니 조금만 나중에 갚게 해 주세요"라거나 "길게 나눠서 천천히 갚겠습니다"라고 직접 상환 계획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제동을 걸어줍니다. 이 법은 5천만 원 미만의 대출에 대해 기한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갚기로 약속한 날이 아직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덕분에 채무자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빚을 갚아나갈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드라마 속 성기훈 씨는 잦은 독촉과 위협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지만, 이 법은 추심 연락을 일주일에 7회로 제한합니다. 특정 시간대나 장소에서의 추심 연락 금지도 요청할 수 있죠. 또한 금융 회사와 채무 조정을 논의하는 동안에는 해당 채권을 다른 추심업체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여, 채권자가 계속 바뀌며 겪는 혼란과 심리적 압박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초대장이 도착하기 전에

물론 평소에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신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지를 넓혀 주는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벨트를 맸다고 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빚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빚은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기회를 사는 행위인 만큼, 자신의 소득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야 하죠. 또한 평소 일정 수준의 자금을 확보해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채무자 보호 제도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안 갚고 기다리면 나중에 다 탕감해 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취지는 빚을 무조건 면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성기훈 씨의 사례처럼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와 추심 압박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서 이탈하게 되면, 금융 회사는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사회 전체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연체 초기 단계에서 상환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채무자는 경제 활동을 이어가며 채무를 갚아나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재기를 돕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제2의 성기훈 씨들에게 '오징어 게임 초대장'이 아니라, '빚을 안전하게 갚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제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용어 정리 •

**** 도덕적 해이**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휘원 KDI 전문연구원
hwseo9543@kdi.re.kr

참고문헌

고제헌, 「주요국 채무조정제도 분석」, 주택금융연구원, 2023.10.

금융위원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도자료, 2024.7.4.

금융위원회,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자료, 2024.10.16.

김대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제도의 문제점」, 『중앙법학』 제25권 제4호, 2023.1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소개」,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470

오윤해, 「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4.12.

Albanesi, S., & Vamossy, D. F., "Predicting Consumer Default: A Deep Learning Approach", NBER Working Paper No. 26165, 2019.9.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me (RCAP) Assessment of Basel III risk-based capital regulations", 2016.3.

01

금융권이 연체 기간 90일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90일이 지나면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탕감되기 때문이다.
② 90일 이상 연체되면 법원이 반드시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90일을 넘기면 정상 상환 상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④ 90일은 개인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02

기한 이익이 상실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밀린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다.
② 밀린 이자뿐만 아니라 남은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
③ 앞으로 내야 하는 모든 이자가 전액 감면된다.
④ 채권자가 금융 회사에서 추심 업체로 자동 변경된다.

03

기존의 채무 조정 제도 외에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새롭게 도입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기존 제도는 채무자의 빚을 100%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기존 제도는 금융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신청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③ 기존 제도는 연체가 심화된 후에야 지원하는 사후적 조치였기 때문이다.
④ 기존 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나치게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04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장기 연체하여 그 사실이 신용정보 관리 기관에 등록되고, 금융권에서 상환 위험이 높은 인물로 분류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① 다중채무자
② 금융채무불이행자
③ 금융채무불량자
④ 채무연체위험자

05

다음 중 개인채무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설명은 무엇인가요?

① 정부가 개인의 부채를 무조건 탕감해 주는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한다.
② 채무자 보호보다는 금융 회사의 채권 회수 권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 정의에 가깝다.
③ 개인의 채무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므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
④ 연체자를 경제 활동에서 이탈시키지 않고 상환을 돕는 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득이 된다.

정답 01 ③ 02 ② 03 ③ 04 ② 05 ④

키워드 실업급여, 사회보험, 고용보험, 사회적 안전망

실직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는 이유

"내년부터(2026년) 실직자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에 6만 8,100원으로, 기존 대비 2,100원 오른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오른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 (중략) …"

출처: 조선일보, 2025.12.17.

교육과정
- 중학교「사회2」우리나라 경제와 세계화
- 고등학교「경제」거시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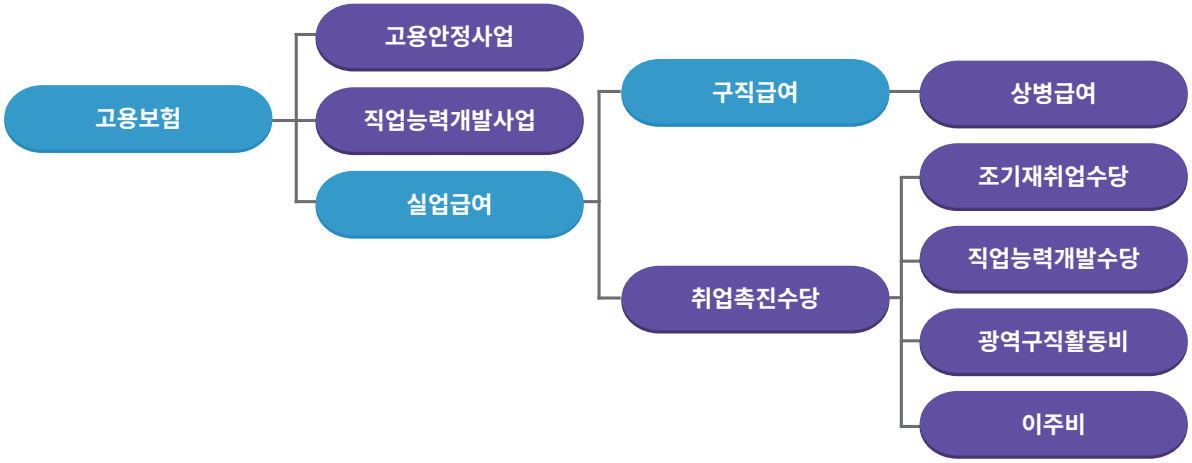
생업을 잃은 사람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게 됩니다. 저축한 돈이 있다면 한동안 버틸 수 있지만, 생활비 지출에 급급해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생계와 취업 준비의 이중고에 시달려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실업의 영향은 개인의 경제 형편에 따라 다르고, **실업을 대비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선택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실업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정부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실업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5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이제 3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실업자가 되기만 하면 정부가 돈을 준다는 착각

실업급여를 정부가 제공하기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이 별도의 기여 없이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모든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 급여**입니다. 그림 1 에서 보듯이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외에도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 2025). 다시 말해, 실업급여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급여가 아니라, 고용보험이라는 제도 안에서 **보험료 납부와 급여 수급이 대응되는 보험**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사람 중에서도, 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1)]

1) 실업부조제도는 보험의 형태는 아니지만, 소득조사(income test)를 전제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 전액 정부 부담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5). 우리나라는 실업부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없지만,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림 1 고용보험제도의 기본 구조



주: 정부의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구직급여란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한 수급자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본적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고용보험백서』의 [그림 2-1-1]과 [그림 3-3-1]을 저자가 재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보편적인 현금 지원처럼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용보험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다수의 국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강제적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보험 방식은 1911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적용 범위와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고용노동부, 2025).[2]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듬해 7월 1일에 첫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임병인, 2024).

고용보험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때문에 고용보험료를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되는 반면**,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급여라는 반대급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국가가 제도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료를 준조세로 분류하기도 합니다(한국조세연구원, 1998). 2026년 현재 근로소득자는 세전 소득의 약 0.9%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3] 통계청 KOSIS에서 조사된 2024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월평균 세전 소득이 약 3,737,000원임을 고려하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약 33,600원 수준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금액과 지급기간은 나이, 근속연수, 연봉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된 날이 180일 이상인 경우**, 2026년 기준 하루 최소 66,048원이고, 120일 동안 총 7,925,760원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제도가 보장하는 하루 최대 급여는 68,100원이며, 최대 기간은 270일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270일 동안 총 18,38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4]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조합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실업 기금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형태로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5).

3) 사업자도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0.9%를 동시에 보험료로 납부하는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4) 정부는 2026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최저액을 조정했고, 이에 맞추어 구직급여 상한액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고용보험을 강제하는 이유

그런데 정부가 **고용보험을 강제**해야만 할까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으로 인한 시장실패, 특히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에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위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존재하지만, 그 발생 가능성은 개인마다 크게 다르며 **제도 설계자**가 이를 개별 근로자 수준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과 태도, 그리고 직무 적합도 등 실업 위험과 관련된 숨겨진 개인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실업보험을 자발적 가입 방식에 맡길 경우, 실업 위험이 높다고 인식하는 근로자가 주로 보험에 가입하고,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로자는 가입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보험 가입자는 점차 고위험 근로자 위주로 구성**되어 **역선택**이 발생합니다. 역선택이 심화될수록 보험금 지출은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지며, 이는 다시 저위험 근로자의 보험 시장 이탈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즉,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장실패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가 바로 **풀링**(pooling)입니다. 풀링이란 실업 위험이 높은 근로자와 낮은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보험 집단으로 묶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을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맡기는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가입시키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설계됨으로써 이러한 풀링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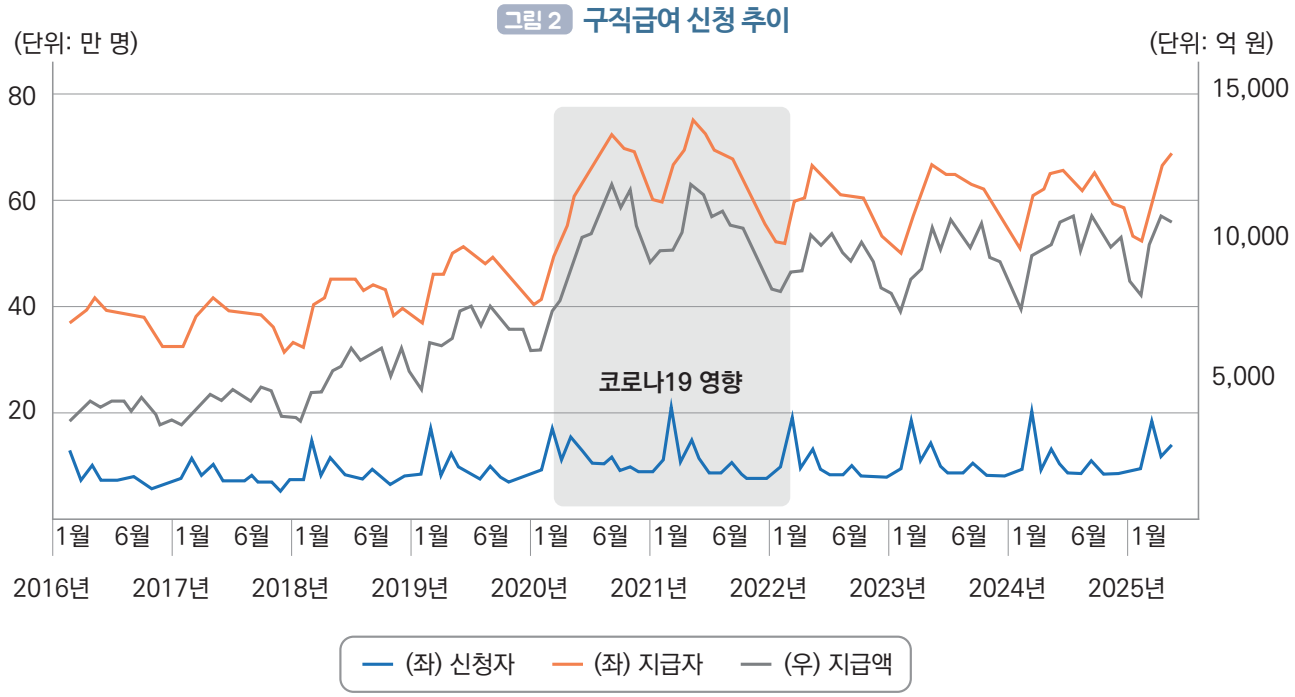
고용보험이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자가 처한 당장의 곤궁한 생활을 면하게 해 주는 직접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가 없는 경우, 실직자는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임금이 낮거나 **근로 조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라도 서둘러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실업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구직자는 급한 선택을 미루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더 잘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구직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잦은 이직이나 반복적인 실업을 줄이고 사람과 일자리가 더 잘 맞는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그림 1 참고).

실업급여의 역할은 생계 안정을 돕고, 직업 탐색 기간을 줄이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로 실업이 크게 늘어나면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면 생산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더욱 둔화시킵니다. 구매력의 뒷받침이 있는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부르는데(김대식 외, 2020) 실업급여는 경기 침체기에도 유효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고용노동부, 2025).

한편, 실업급여는 경기가 나빠질 때 실업자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축소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출이 경기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특성은, **별도의 추가적 정책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경기 변동의 폭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경기 침체기에는 가계 소득

과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하고, 회복기에는 구인구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급여가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가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구직급여 지급이 빠르게 확대된 것은, 고용보험이 단순한 개인 보호 제도를 넘어 거시경제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그림 2 참고).

그림 2 구직급여 신청 추이



주: 지급자는 기존에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에 동 기간의 신청자보다 많음.
출처: 통계청, 「KOSIS – 구직급여 신청 동향」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제도가 설계된 1995년 이후,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의 코로나19 위기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경제 충격 속에서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은 크게 변화하였고 고용 형태 또한 빠르게 다변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적용 범위 확대와 보장 수준 강화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구직 기간의 장기화나 단기 고용과 실업의 반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 도입 30주년을 계기로, 변화한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2025년 말에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고용 형태의 다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조정이 이루어져, 고용보험이 단순한 소득 보장 제도를 넘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차성훈 KDI 전문위원
econcha@kdi.re.kr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5년판 고용보험백서』, 2025.
국회예산정책처, 『실업급여 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성 분석』, 2024.
김대식·노영기·안국신·이종철,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2020.
통계청, 「KOSIS – 구직급여 신청 동향」, https://kosis.kr
한국조세연구원, 『준조세(Quasi-tax)에 관한 연구』, 1998.

0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을 핵심으로 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부차적 제도이다.

② 고용보험은 실업 이후의 생계 보장과 재취업 지원을 결합한 사회보험 제도이다.

③ 고용보험은 경제 위기 시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02

본문에서 설명한 고용보험을 강제하는 경제학적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업 위험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 근로자보다 기업이 실업 위험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③ 자발적 가입 방식에서는 역선택으로 인해 보험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④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03

다음 중 글에서 설명한 실업급여의 거시경제적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급여 지출이 감소하여 재정 부담을 줄인다.

② 실업급여는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③ 실업급여는 경기 침체 시 소비 감소를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로 작동한다.

④ 실업급여는 유효수요를 감소시켜 경기 회복을 지연시킨다.

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실업보험 시장에서는 실업보험을 자발적 가입 방식에 맡길 경우, 실업 위험이 높다고 인식하는 근로자만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숨겨진 특성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보험 가입자가 고위험 집단 위주로 구성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위 글에서 설명한 정보의 비대칭과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업 위험이 높은 근로자만을 선별하여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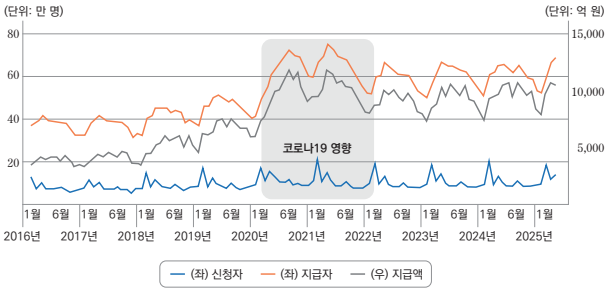
② 개인별 실업 위험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

③ 실업급여 수급 이후 구직 활동을 엄격히 관리하여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방식

④ 실업 위험의 크기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하나의 보험 집단으로 묶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

05

다음은 구직급여 신청자, 지급자, 지급액에 대한 그림이다. 아래 보기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매년 12월과 1월에는 신청자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이 있다.

② 코로나19 시기에 지급자와 지급액이 모두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감소했다.

③ 지급액과 지급자는 대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④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가 지급자보다 항상 더 많다.

정답 01 ② 02 ③ 03 ③ 04 ④ 05 ④

경제로 세상 읽기 Vol. 5

기획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정책팀

집필·검토 이지은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문위원
차성훈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문위원
임효상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윤승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문연구원
김유영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임효지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문연구원
서휘원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문연구원

디자인 다다디

문의·제안 044-550-4643, econcha@kdi.re.kr

경제로 세상 읽기

기획재정부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이 책자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포털 경제배움e+(econedu.go.kr)에 게재된 〈경제로 세상 읽기〉 시리즈를 엮은 것입니다.

발행 연도: 2025년 **발행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디자인**: 다다디 **문의**: 044-550-4643 **주소**: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